

민주시민교육활동가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자 료 집

<이미지>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 7월 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외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관 :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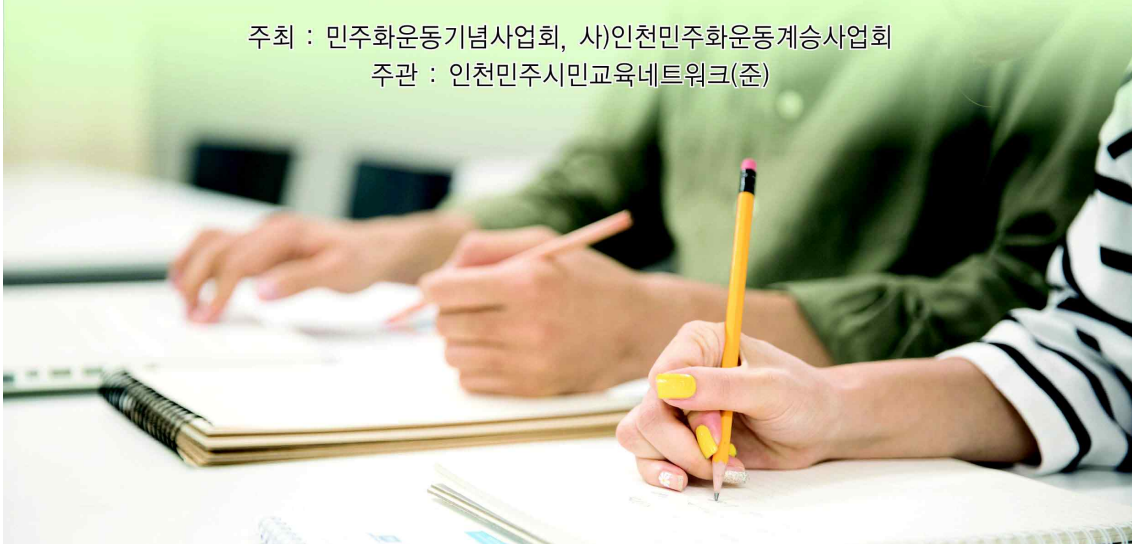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강좌

- 접수기간 : 2019. 4. 3(수) ~ 2019. 4. 16(화) 10일간
- 대 상 :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및 시민 30명 내외
- 교육기간 : **2019년 4월 24일~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전교조 인천지부 및 부평아트센터
- 문 의 : 032-862-5353

강 좌 내 용	회차	일 정	세 부 주 진 내 용
	1차	4.24	- 오리엔테이션 - 공화국, 민주주의, 시민의 불협화음 :공화국과 시민의 탄생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
	2차	5.8	- 민주공화국은 민주적인가 :한국의 민주공화국과 민주시민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
	3차	5.22	-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시민교육 / 김창엽(서강대학교수)
	4차	6.5	- 지방자치와 민주시민교육 / 조선희(인천광역시의회의원)
	5차	6.19	- 민주적으로 토론하기 / 박수정(에듀플랜 대표)
	6차 워크샵	7.3	- 민주시민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상상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와 방향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

※ 강사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관 :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



차 례

1. 공화국의 시민은 정의로운가
 ; 공화국과 시민의 탄생 ----- 5쪽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 민주공화국은 민주적인가
 ; 한국의 민주공화국과 민주시민 ----- 22쪽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시민교육 ----- 45쪽
 김창엽 (서강대학교 교수)

4. 지방자치와 민주시민교육 ----- 78쪽
 조선희 (인천광역시의회의원)

5. 민주적으로 토론하기 ----- 79쪽
 박수정 (에듀플랜 대표)

6.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자
 ; 민주시민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상상 -----87쪽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강>

공화국의 시민은 정의로운가: 공화국과 시민의 탄생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공화국에 대한 질문

자본주의는 그대로 놔두면 자본의 무한질주로 인해 불평등의 사회가 된다. 그래서 각 공동체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도 헌법에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헌법 1조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공화국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민주를 덧붙인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전이 내가 동의할 수 있는지, 동의한다면 현재 진짜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인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면 공화국의 시민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제 공화국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대부분 당황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을 찾고 위키백과를 찾아봐도 신통한 정의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세상인 공화국의 실체를 잘 모르다니!

공화국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대체적인 정의를 찾아가다 보면, 일단 주권재민,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헌법 2조가 그렇게 정의되었고, 앞에 붙은 민주공화국의 민주가 주는 뉘앙스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조건일까? 모든 권력은 개인이 아닌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이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선명하지 않아 찝찝하다. 그래서 공화국 앞에 민주를 붙여 보면 개념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민주도 사실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민주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다. ‘자유’민주, ‘사회’민주, ‘인민’민주처럼 말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선포하는 비전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면 이 사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고,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길이 남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그 정의에 근접하는 상태에 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민주나 인민민주를 추구하는 공화국이라면 평가가 달라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루소의 말을 덧붙여서 공화국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공화주의에 걸맞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되며,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

공화국에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 시민들이 이 문제로 발언이나 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공화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로부터 권위와 권력이 나오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 관점은 자유민주에서 담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로부터 자유(freedom from the state)와 기회의 평등을 담는다면 루소의 공화국은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the state), 즉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은 출발선을 같게 할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의 평등을 담는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급진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그대로 두고 본질적으로 이런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상을 인민민주주의에 담고자 한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긍정하고 경쟁의 결과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기회의 평등을 준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지배세력은 권력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을 내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동물농장>을 패러디해서 쓴 <자본주의 동물농장>(존 리드, 2015, 천년의 상상)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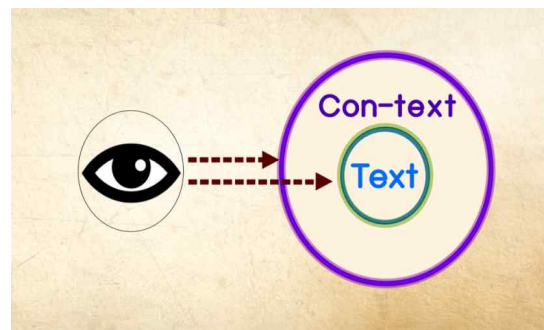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이 공화국은 민주주의 개념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자유민주, 사회민주, 인민민주를 더해야 명확해질 수 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면, 사회민주공화국은 수정하고자 하며, 인민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공화국일까?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이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일까, 아니면 유교자본주의일까, 그도 아니면 천민자본주의일까? 본 강의에서는 자본주의 등장의 맥락에서 시민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자본주의의 탄생: 인클로저 운동과 스피ن햄랜드 제도를 중심으로

관점

우리는 보통 텍스트(text)만을 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사회자나 강의자가 방송에서 매우 잘하는 줄 알지만,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작가, 피디, 음향감독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맥락(context)을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알콜에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다. 그것을 보고 노동자는 저래서 안되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는 '얼마나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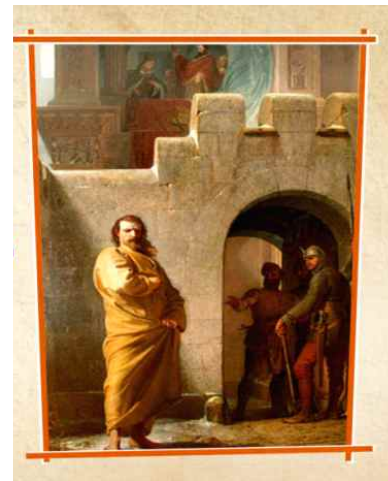


있으면 저렇게 술에 의존해서라도 살아가는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막일을 했는데, 이 당시 노동자들은 점심에 막걸리를 먹지 않으면 오후에 일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막노동자들은 저래서 안돼'라고 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맥락)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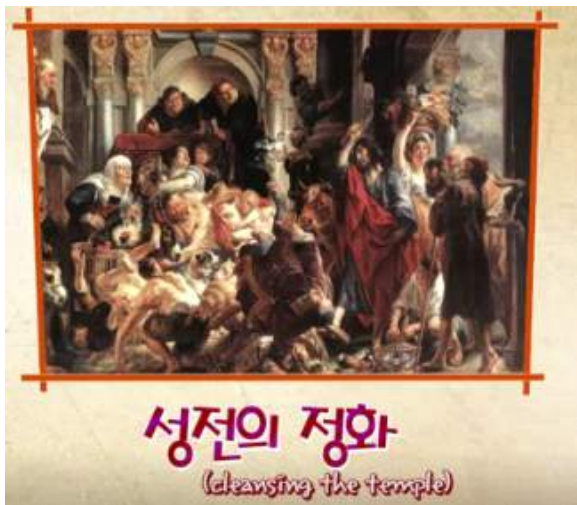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 즉 텍스트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꿈이 없는 것이지만, 컨텍스트에서 보면 꿈을 가져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한 것이다. 자본주의 탄생을 이해할 때도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봉건제-하나님 소유의 교황의 시대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에 봉건제에서 땅은 누구 소유했을까? 외형상 영주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리상 그 땅은 영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 중세는 신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땅을 영주에게 빌려주면서 '니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다. 따라서 영주는 땅의 점유권이 있었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주에게 땅을 주면서 이 땅을 농민들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농민은 살기 힘들어도 자기 땅을 갖고 있었다. 중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귀족이나 국왕이 아니라 중세에서 제일 힘이 센 존재가 교황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다. 카노사 성에서 황제에게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독일황제 하인리히 4세는 자기 나라의 주교를 지명하고 싶었다. 그러자 그레고리 7세인 교황이 하인리히 4세인 황제에게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해서 양자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카노사성에서 황제는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다. 위의 그림은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 7세에게 빌려 온 장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중세의 제1신분은 귀족이 아니라 성직자였다.



중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팔거나 이익을 탐하면 안되는 시기였다. 또한 물물교환이 거래의 핵심이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환전상이 환전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 행위는 성전의 성직자에게 돈을 받쳤을 때 가능한 행위였다. 예수는 크게 분노하여 단죄했다. 왼쪽의 그림을 '성전의 정화'라고 한다. 한마디로 예수가 깡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을 벌면 안되는 시절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 “먼저 온 자들의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성경 마태복음 20:1-20: 16 참조). 포도나무 농장에서 주인이 일할 사람을 데려 온다. 아침에 가서 데려오고, 점심에 가서 또 데려온다. 그리고 일 이 끝나가는 저녁에 데려온다. 문제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임금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있다. 예수는 이 우화를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처음에 온 사람은 인력시장에서 먼저 팔린 것을 보니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다. 점심까지 안팔린 사람은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다. 저녁까지 안팔린 사람은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노인이거나 장애 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필요한 것만큼 먹고 살만해야한다. 어쩌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나라라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부르주아지의 등장

이상에서 보듯이 중세에는 사적 소유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윤개념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이상한 놈이 나타난다. 그들은 교황과 영주들이 중심이 되어 영지로 구분된 땅이 아닌 빈공간에 도시를 만들었다. 이들은 성을 쌓기 시작한다.



불어로 부르그는 성이다.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즉 부르주아지이다.

중세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팔면 안된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윤을 탐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성경 마태복음 19:23,24). 그리고 또 말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성경 마태복음 5:3). 그런데 부르주아지들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자들이다. 물건을 만들 때도 쓰려고 만들기보다, 팔려고 만든다. 저 부르주아지는 기존의 중세 성전의 정화와 예수님이 질책을 했던 그 자들이었다.

부르주아지는 그렇게 예수가 싫어했던 온통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명화 ‘환전상과 그 아내’라는 작품에서 환전상은 돈을 세고 있다. 아내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있다. 또 다른 그림은 램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다. 그림의 주인공은 노인이다. 이제 얼마나 살 것인가.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 촛불을 비추어서 돈을 보고 있다. 쌓여져



있는 것은 재산목록이다. 중세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는 중세와 완전히 다른 관념이 탄생했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인간형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 안에 있는 사

람들이 많이 벌기 시작한다. 돈을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림은 성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보여준다. 하나의 그림인데, 둘로 나누어 보았다. 성안은 부르주아지가 사는 곳으로 화려하다. 성바깥은 어떠한가. 저 안의 농노들이 일하고 있다. 중세의 농촌 풍경이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자본주의와 봉건제 사회를 비교한 것이다.



양이 사람을 잡아 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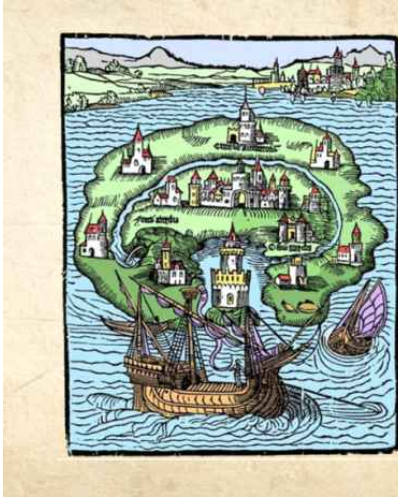
자본주의가 막 등장하고 있을 때 만약 내가 영주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영주라면 나도 부르주아지가 탐나지 않겠는가. 나도 부르주아지나 한번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 도시에서는 모직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모직산업은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영주는 농민들에게 세를 받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돈을 더 벌 수 있었다. 영주는 이 상황에서 '다 나가'라고 말한다. 정치우화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의 것인데. 다 나가라니?"라고 동물들이 말한다. 다 내몬다음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운다. 이것이 인클로저 운동이다. 토마스 모어는 이것을 빗대어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외쳤다. 그의 <유토피아>라는 글에서 나온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는 표현은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무서운 말이다. 이 사건으로 자본주의가 전면화된다. 너도나도 양털을 팔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제 봉건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즉 봉건제의 지배세력도 자본가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은 보통 아주 온 순하고 조금밖에 먹 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는 아주 게걸스 럽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마을을 없애버립니다. 교회들은 남겨놓는데, 그것은 단지 양의 막사로 쓰기 위해서지요. 있습니다.

고 사나워져서 사 람들까지 먹어 치운 다고 들었습니다. 양떼들은 경지, 가 옥, 도시들을 황폐 화시킵니다’,

‘국내 어느 곳이든 지 양들이 가장 질 좋은, 그래서 가장 값비싼 양모를 생산 하는 곳에서는 귀족 과 젠트리(부르주아

지), 심지어 상당히 많은 수도원장들(종교도 가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그런 거룩한 사람들-까지도 땅의 전 소유자들이 거두어들인 옛 지대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나태와 사치 속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자본주의가 전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마을을 없애버립니다. 교회들은 남겨놓는데 그것은 단지 양의 막사로 쓰기 위해서지요.’(토마스 모어, 2011: 32~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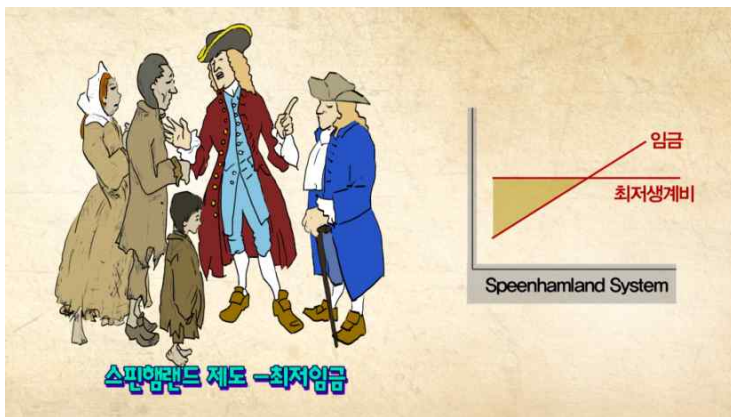
인클로저 운동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도시로 간다. 도시에는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적질, 걸인, 부랑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살만한 조건도 만들어 주지 않고 내쫓아 버렸는데, 내쫓기니 중세에는 땅이라도 있었는데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이조차도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오로지 먹고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일할 자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잘 보여준 것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도시로 도망간 사람들이 거지행세를 하다 잡히면, 첫 번째 채찍질을 당한다. 두 번째는 귀를 자른다. 세 번째는 몸에 낙인을 찍는다. 네 번째는 사형을 시킨다.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들은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도 나타난다.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올리버와 그의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음식이나 처우를 가장 낮은 것으로 해 준다.

스핀햄랜드 제도, 귀족들의 대응

자본주의가 등장기에 중세봉건제 영주들은 두렵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되기도 하지만 봉건제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왜 당황하는가. 일했던 농노들이 영주의 땅에서 도시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이 스펀햄랜드 제도이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설명이 먼저 해야 한다.

파이가 있다. 파이 한 조각을 콩짜로 받았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문제는 파이를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는지 아는가. 너 이 파이를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고마워해야한다.’ 이럴 경우 기분이 좋을까? 예를 들어 누군가 밥을 사줬는데 기분 나쁜 경우가 있다. 밥한끼 사면서 너무 잘난 척해서. 이럴 경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할 때가 있다. 파이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파이가 내가 상대에게 고마워해야하고 감사해야하고 상대는 나에게 으스스대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어떤 파이냐면 내가 일을 했고, 내가 일한 몫인데 같이 나눠보자고 하면, 같이 나눠서 내가 가졌다. 그것은 나에게는 권리일 것이다. 파이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파이를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담아서 받는 것이 중요한가. 이처럼 파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나누는 것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일방적으로 귀족들이 파이를 나누어 농민들에게 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제도의 배경은 이렇다. 중세에 영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여행할 자유가 없다. 땅과 신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노라는 것이 농민노예이다. 내가 결혼도 하고 여행도 할 자유도 있지만 이사할 자유는 없다. 그래서 농노였는데 이 농노들이 도시들이 생기니까 이 곳보다 저 곳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 농노들이 탈출하기 시작한다. 이때 중세 지배세력이 정주법을 만든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부르주아지들은 정주법을 폐지하라고 한다.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망 온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력을 싸게 살 수 있다. 이제 정주법이 폐지된다. 그러면 중세영주 입장에서 농노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아무도 안남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낸 법이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스핀햄랜드는 조그만 시골마을이다. 스핀햄랜드제도는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적정한 수준보다 돈을 적게 받으면 우리가 보존해주겠다. 이때, 최저생계비를 빵 가격과 가족 수에 연동한다.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라 더 주고, 빵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 그 가격에 주겠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이 발상은 놀랍다. 그래서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스핀햄랜드제도를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로 설명을 한다. 그런데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봐야 한다. 왜 시골에 있는 유지들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농노가 도망을 가면 영주들이 매우 큰 타격을 보게 된다. 노동력이 유실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다. 소위 오늘날의 최저임금제도나 기본소득제도를 만들어 놓고, 농민이나 노동자의 이탈을 막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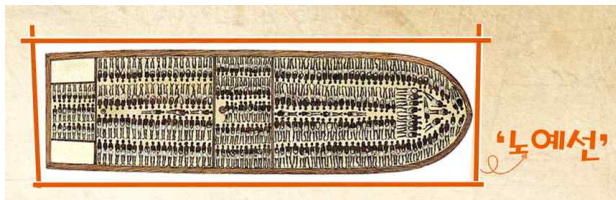
이 제도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좋을까 나쁠까.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나 농민의 단결을 담고 있는 법을 폐지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최저임금을 높이려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수준은 누가 정하는가. 지배자가 정한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기준선이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힘이 없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임금이 낮아진다. 최저임금아래로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주들은 임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되니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적당히 하나 돈을 똑같이 받는다.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임금은 계속 내려가게 된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스핀햄랜드 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중세에서 근대로 가려고 할 때, 시골에 있는 지배세력들이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한 것이 이 제도이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이 제도를 보고 부르주아지와 정부는 시혜, 즉 사회복지가 사람들을 나태하게으르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신빈민법개정은 가혹하게 빈민을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3. 프랑스 대혁명과 시민의 탄생

자본축적

산업혁명은 많은 노동자들을 공장에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들을 향상시키면서 부를 축적해가는 계기였다. 부르주아지들은 또 한편에서는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삼각 무역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 공산품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아프리카에서 노예와 바꾼다. 노예를 배에 다 태우고 아메리카에 가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한다. 이것을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 유럽으로 와서 판매한다. 이 삼각무역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한다.



그림은 노예를 싣고 오는 장면이다. 배 밑바닥에 노예들이 있다. 이것을 하인리히 하이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고무도 좋고 후추도 좋다. 300자루에 300통 사금도 있고 상아도 있다. 하지만 검은

상품이 더 좋다. 나는 세네갈 강가에서 검둥이 600명을 값싸게 사들였다. 내가 준 것은 포도주와 렌즈와 강철제품뿐. 그것으로 8배의 이익이 남는다. 만약 검둥이가 절반만이라도 살아 남는다면.

이 시에 따르면 검은 상품은 노예다. 시에서 보듯이 저들이 죽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부르주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갔다.

프랑스대혁명과 국가/국민의 탄생

이처럼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지는 무서울 게 없는데 단 한 가지가지 못한 것이 정치권력이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시에예스이다. 여기에서 1신분은 성직자고 2신분은 귀족이고, 3신분은 부르주아지다. 이 책은 주장한다. '우리(부르주아지)는 모든 것이다. 엄청난 부를 생산해내니.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낫싱(noting)이다. 정치권력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everthing)이 되어야 한다.'(시에예스. 2003).

이 책을 부르주아지가 읽었다. 당시 절대군주 루이16세는 사치도 했고 군비와 관료제 운영을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다. 부르주아지가 세금을 대고 있었다.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했다. 이때 부르주아지는 의회에 가지 않고 테니스 코트에 모인



다. 이것이 프랑스대혁명의 시작이다. 이때 국왕쪽에서 군대를 모아 몰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부르주아지는 우리도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한다. 이때 앞장 선 것이 쌍궤로트다. 긴 바지 입은 민중들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을 죽이는 것이다. 저 그림의 보게 되면 왼쪽이 루이16세이다 두 번째 그림의 암살당한 사람이 마라이다. 마라는 상당히 급진파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당시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었다. 온건파인 지롱드는 혁명을 좋지만 개혁으로 가자고 주장한 반면 급진파인 자코뱅은 근본적인 민중혁명을 꿈꿨다. 마라는 지롱드파를 지지했던 여인에게 살해된다. 다비드가 그린 그림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민중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 대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는 왕을 죽이고 부르주아지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대국가와 국민의 탄생이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불렸던 노래가 라 마르세이즈(La Marseillaise)이다.

일어나라 조국의 자식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압제자의 피묻은 깃발이
우리를 노리고 휘날린다 (2번)
들리는가 전장의 소리가?
사나운 적들의 고함소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
우리 처자의 목을 따려한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아!
시민군을 조직하라!
행진하라, 행진하라!
적의 더러운 피로
우리 논밭의고랑을 적시자!

루이 16세의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다. 친정이 오스트리아이다. 오스트리아 왕가는 혁명군이 자기 딸을 죽일지 모르고 저 혁명을 그냥 두면 유럽으로 퍼질 것이라는 생각에 군대를 보낸다. 그때, 프랑스의 시민군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라마르세이즈다. 적들의 피가 고랑에 흐르넘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운다. 그게 오늘날 프랑스 국가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대국가와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시민들의 탄생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봉건 영주가



큰 땅을 갖고 있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등. 그의 땅이기에 국가, 민족, 국민이라는 의식이 없었는데 까지 달라졌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폴레옹 대관식이다.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대관식에서 비오 7세라는 교황이 아닌 자신이 직접 완관을 쓴다. 이것은 교황의 권력이 국왕에게로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마르세이즈에서 본 것처럼 이제 국민의식이 생기는데,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다. 그림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칼을 받고 있다. 그 칼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다. 기원전 7세기의 호라티우스 형제가 맹세하는 것이다. 로마의 한 가문인데, 호라티우스가와 로마와 알바왕국이 싸움이 붙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피를 흘리니 신사협장을 체결했다. 각 나라에서 용사 세 명이 나오는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자로 하자는 협약이었다. 로마왕국에서는 호라티우스 3형제가 나오고 알바왕국에서는 쿠리아티우스 3형제가 나온다. 여인들이 괴로워하는데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알바왕국의 남자들이 자신의 친정 오빠들이기 때문이다. 비참하게 우는 여인도 쿠리아티우스 가문으로 시집을 갈 예정에 있다. 루이 16세가 저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권력에, 국가에 충성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손익계산과 상퀼로트의 저항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부르주아들이 집권하면서 국민국가를 만드는게 기여했다. 이제 중심은 신이 아니라 정치이고 국가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부르주아지는 정치권력까지 갖게 되었다. 상퀼로트인 민중(우화 속의 두더지들)은 시민권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는데,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선언 17조에는 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1830년대 인구가 삼천만 명인데 선거권 가진 사람들이 24만명 밖에 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 제도에서 민중은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상퀼로트 입장에서 얻은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저항이 시작되었다.

드라크루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이 배경이 아니다.

1830년에 왕정이 다시 복귀한다. 월터루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다음에 루이 18세(루이 16세의 동생)가 반혁명정부를 만들었는데 이에 저항하는 그림이다.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상퀼로트들이 주도한다. 이것은 약자들, 즉 민중이 앞장을 선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희생을 당하는 장면이다.

레미제라블도 약자들의 저항이다. 1981년 뤼옹에서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한다. 1832년에 민중들이 나서서 6월 봉기를 일으킨다. 그것에 대한 배경이 장 발장이다. 장발장도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레미제라블은 미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비천한 사람들이 나온다. 장발장은 조카들 주려고 빵 훔치다가 19년 감옥살이를 한다. 코제트라는 그 딸도

엄마가 몸을 팔던 사람이었고, 자베르라는 경감도 사실 엄마 감방에서 점을 봐주는 죄수였다. 다 비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미천한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저항을 시작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848년혁명과 1871년 파리 코뮌이다. 파리코뮌을 거치면서 인터내셔널 노래가 나온다.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아래 전진 또 전진

라마르세이즈는 조국과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인터내셔널은 노동자 계급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사를 보게 되면 '깨어라 노동자에 군대'라는 말들은 깨어라 시민, 국민이 아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에 단결하라. 소위 이야기하는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것이다. 라마르세이즈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가사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데, 그 정의는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저주받은 대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지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후의 결전, 들어라 어떤 최후의 결전, 투쟁으로서 무찌르리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사에서 보면 참된 주인, 참 자유, 부르주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자유아닌가, 참 자유를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시민의 탄생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올랜마을 혹은 소위 보드라운 양털마을에서 농민들을 내 쫓고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에서 주체가 되었던 부르주아지들은 처음에 경제권력을 갖고, 정치권력을 갖지만 상퀼로트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이를 깨닫게 된 상퀼로트, 즉 동화에서 두더지들은 저항한다. 요약하면, 먼저 인간이 탄생을 하는데 근대에는, 신의 백성에서 시민의 탄생이 된다. 신과 왕을 연결하는 것이 성직자였다. 그런데 시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국가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론들이 나타면서 근대국가가 탄생했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시민이라는 존재는 나는 국가로 가면 국민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나타나니 소비자로서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민이든 소비자든 모든 인간은 평등해보이나, 재산을 갖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나 국가에서나 불평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지만 알고 보니 상퀼로트들에게는 여전히 견딜 수 없는 농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힘든 세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과정이 되었다.

4. 오늘날의 시민과 권력의 눈으로 본 권리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로봇이 전 사회 모든 영역에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미래는 장밋빛일까, 아니면 암울할까? 영화 <her>는 장밋빛 미래의 단초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인공지능 로봇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SF멜로 영화인 <her>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주인공이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짜증하나 안내고 들어주는 장면을 보여준다. 특히 사만다는 딥러닝(deep learning), 즉 스스로 지능이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딥러닝을 통해 처음에는 어설픈게 만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연인이 되어 간다. 이제는 연애까지



인공지능로봇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영화 <터미네이터>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지배한다. 인공지능로봇은 인류를 노예로 부린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공지능로봇은 인류에게 희망적일까, 절망적일까. 적어도 일자리에서 만큼은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톨 게이트를 지나다 보면 예전에는 하이패스가 한 군데였고 요금을 징수하는 부스가 여러개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었다. 기계가 점점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복지관 관장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하이패스로 가지 않고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곳으로 간다. 바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해야 저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보면 저런 일자리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화장실도 제때 못가서 질병을 갖는 저런 일은 인공지능로봇이 해야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하니, 인간은 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왜 놀지 못하는가? 인공지능이 일해서 번 돈을 로봇을 가진 사람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다. 현실은 인간이 더 열악한 작업장으로 가게 된다.



자본가는 인공지능이 좋다. 이들은 단결도 안한다. 그리고 파업도 안하고 임금인상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신사는 가능하면 기계로 대체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러다이트운동에서 경험했다. 이때도 노동자는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럴 때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를 했더니 기계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가진 신사가 당황한다. 그리고 그 신사를 정부가 오히려 옹호하기 시작한다.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킨 자를 폭도로 보고 가둔다. 기계의 이면에는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의 뒤에는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력이 있구나를 알게 되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차티즘 운동으로 갔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가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노동자와 기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AI를 가진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구도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로봇과 노동자가 서로 경쟁을 해서는 안되고, 인공지능로봇을 가진 자본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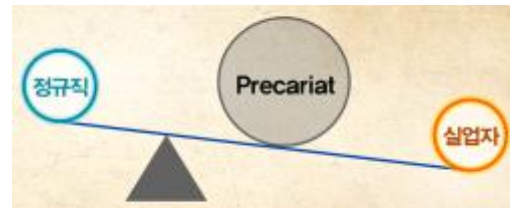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이 전면화되기 시작하는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로봇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로봇을 사용법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얼굴인식기에 어떤 흑인이 친구 사진을 올리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니 고릴라로 답했다. '내 친구는 고릴라가 아니야!' 그런데도 왜 고릴라라고 했을까?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만든 인공지능로봇을 심사위원으로 미인, 미남 선발하게 하니, 대부분이 백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이 기계를 만들 때, 프로그래밍할 때, 백인을 미인, 미남의 기준으로 포함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딥러닝을 하면서 미인, 미남의 기준을 정형화한 것이다. 딥러닝의 데이터는 주로 백인 남성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KKK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좋은 조직이라고 답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어디선가 지식을 갖고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는데, 10대기업 정규직의 퇴직연령이 41세다. 누구나 프레카리아트가 되는데, 정규직이 되기 위해, 구조조정에서 정리하고 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데, 그럴수록 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정규직은 좋은가? 가장 황금기를 공장에서 보내야 하는가?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존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존의 문제는 어쩌면 해결되었고 될지 모른다. 1차 산업혁명만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감당하는 사건이었고, 어마 어마한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2차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생산, 3차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생산. 4차는 인공지능까지 왔다. 이 사이 인류의 생산력과 생산량은 어마 어마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 많은 생산물이 어디로 갔는냐는 점이다. 그리고 왜 인간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까? 인공지능로봇의 생산물들을 인류가 새롭게 분배한다면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두 가지 갈래의 방향이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향과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 그 자체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파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에 적극적이다. 왜일까? 생산성이 증대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일자리가 축소되니 일자리 경쟁이 심해진다. 그러면 프레카리아트가 증가해서 정부는 기본소득을 주게 된다. 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것을 보장한다. 잔여적 수준의 보장을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이다. 우파들은 예전의 의료, 교육에 플러스하여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안에 이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의료, 소득결핍 등 사회보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면 정부가 비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좋아진다고 본다. 기본소득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단결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이 단결하는 이유는 임금인상, 노동조건으로 단결하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노동자들의 단결의 동기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우파는 이것이 임금수준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즉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면 임금을 줄여도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좌파들의 생각은 다르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면 된다. 즉 8시간 일했는데 일자리가 줄어서 두 사람이 4시간씩 나누어 갖는다. 잡쉐어링(job-sharing)이다. 이처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단축된 만큼 돈이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창출된 늘어난 부로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때 기

존 사회보장에 플러스하여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시민노동과 시민임금

현재 도서관이나 마을에서 책모임 등 각종 토론모임과 봉사활동이 점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강의, 토론, 책모임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우정도 쌓고, 연대를 다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회합에 한 사회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시민이 모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하는가 논의하는 것이고 이 모임으로 인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시민노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시민노동은 고대에 아테네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공동체의 방향과 실천을 고민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모여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때 한 사회는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제공해주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면, 노동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머지 시간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자원봉사도 하고 거기에 돈을 줄 수도 있다. 즉 사회복지, 기본소득 등을 통해 시민노동에 시민임금을 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소득에는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소득이 있고, 진보주의자들의 기본소득도 있다. 그 차이는 어느 쪽으로 갈지를 만드는 것의 핵심은 생산성 증대를 누가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분배가 시민노동에 시민임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향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하는 점이다. 사회복지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사회복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기본 소득 이전에 사회보장이 튼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임금을 논의할 때, 가사노동의 위상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탄광노동자와 한국의 탄광노동자는 상이한 임금기준이 있었다. 한국은 회사에 출근해서 지하 갱도에 내려가면 서부터 임금이 붙는데, 영국은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동시간이된다. 어떤 임금체계가 맞는가? 그것은 국가와 노사간의 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회사에 노동자가 일하러 올 때 몸 속에 노동할 능력, 즉 노동력을 담고 온다. 그렇다면, 집에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노동, 즉 가사노동은 첫째, 임금을 줘야 하는가,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가, 둘째, 준다면 누가 줘야 하는가. 가사노동에는 임금노동처럼 돈을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우리는 이 노동을 비노동으로 보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는데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참여해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소급해서 받아야 할 것이다. 소급해서 어머니, 할머니 다 올라가서 받으면 때부자가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얼마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결정한다.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토론하는 것이 가능한 모임들, 그런 토론들은 사회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 스웨덴의 스터디 씨클에는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책모임의 리더에게는 일정한 지원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들이 있다. 스위스에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지급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부결되었다. 한국 신문들이 선진국 시민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받는다라는 보도

를 하기도 했다. 300은 화폐가치로 보면 큰 돈이 아니기도 하지만, 300을 주게 되므로 다른 사회보장비가 깎이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본 소득을 주장한, 실험한 나라를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를 주장하는 나라들의 정권이 오히려 보수당이 실험하려고 한다.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기본소득을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공지능로봇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본소득, 정규직이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하는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은 시민들을 더더욱 규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노동과 경쟁을 하게 임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노동부터 연대와 정치의 관점에서 탈노동(임금노동으로부터 탈피)에게까지 시민임금을 주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왜 임금을 왜 주지

않지? 또한 다양한 임금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연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플렉시빌리티(flexicurity)인데, 구조조정이 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 동시에 해고되어도 안정적인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을 고용안정성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을 통해 생존에 큰 문제가 없는 사회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림에서 왼쪽은 시장이 분배했지만, 오른쪽은 정치적 토론을 통해 어디부터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탈노동은 현재의 임금노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가사노동, 토론, 책모임 등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왼쪽은 경쟁의 가치라면 오른쪽은 연대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강>

민주공화국은 민주적인가: 한국의 민주공화국과 민주시민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편인가

봉건제 사회는 신이 중심이 된 사회이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 신민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신의 의지를 알아내는 성직자가 제1계급이었다. 근대는 신이 아닌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간인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 선언을 한 데카르트는 신을 믿었을까? 그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렇다면 나와 신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 신이 계신다’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신의 존재는 인간이성의 검열을 거쳐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이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나이다. 생각의 주인이 인간 개인이라는 선언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모두에게 공표된다.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언론, 출판, 집회, 종교, 양심 등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간이 시민이다. 즉 시민은 말할 자유가 있는 존재이다. 인권선언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시민은 생각할까? 히틀러에 동의하거나 순응 혹은 방관했던 시민들은 생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히틀러의 생각을 상식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동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던 선전부 장관 괴벨스는 시민들이 생각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의 통에 갇혀 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는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시민들은 생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와 괴벨스와 같은 예외적 권력 하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생각의 주인자리를 시민들에게 순순히 넘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생각의 주체가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언론, 경찰 등을 통해 늘 시민들에 생각에 관여한다. 권력이 통치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폭력과 동의이다. 군대, 경찰, 감옥제도 등을 통한 폭력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낮은 반면 교육, 언론, 문화 등을 통한 동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권력은 동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시민교육으로 집약된다. 이런 점에서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 정권의 억압보다도 적극적인 시민교육의 결과이다. 그런데 시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된다. 포장지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회권을 강조하는 서유럽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시즘, 신자유주

의와 사회주의도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민주시민교육은 누구의 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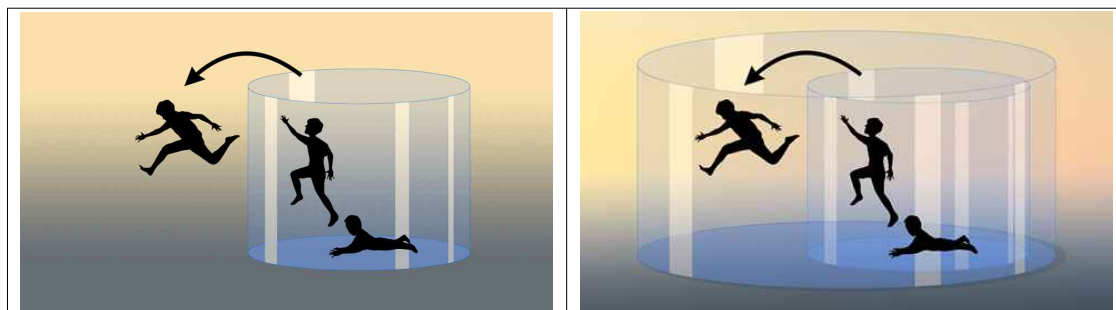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민주시민교육‘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제기되는 시민교육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본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면, 즉 주체와 의도를 문제삼아 오늘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제는 통과 달달놈이다

통과 사회권

통이 있다. 통속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건디기 힘들어 튀어 나온 사람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튀어 나온 사람과 쓰러진 사람을 적응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라고 전제하려면, 통이 정의로와야 한다. 만약 통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통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림 1] 통과 사람



통을 넓힌 그림이 [그림 1]의 오른쪽이다. 통이 넓다면 왼쪽 그림에서 튀어 나온 사람도 사실은 통 속에 있는 것이다. 쓰러진 사람도 좁은 통에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넓은 통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아니라 통이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문제인 사람을 사례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통이 문제라면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리는 인성교육이나 시민적 덕성처럼 개인의 윤리와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사회의 관리는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의료, 교육, 소득, 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민교육은 통을 넓히는 것을 그들의 권리로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힘을 시민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힘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나 덕성교육과는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말할 권리인 자유권을 부여한다.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 등의 자유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 보장한다. 그런데 이 권리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 않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잘못 말했다가는 해고를 당하는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소신껏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유권과 정치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통, 즉 사회는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된 체제다. 자본은 시민들의 생각에 관여하여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소비자로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나의 욕망과 생각은 자본이 개입한 것일 수 있다. 자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회사 사장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현상은 생존권력의 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본으로부터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회권을 권리로써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조건에 관한 권리이다. 베버리지는 결핍은 소득 보장으로,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질병은 공공의료로, 불결은 공공주택으로, 나태는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권리로써 보장한 것이다. 이처럼 서유럽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통을 넓히는 것이었고 이것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비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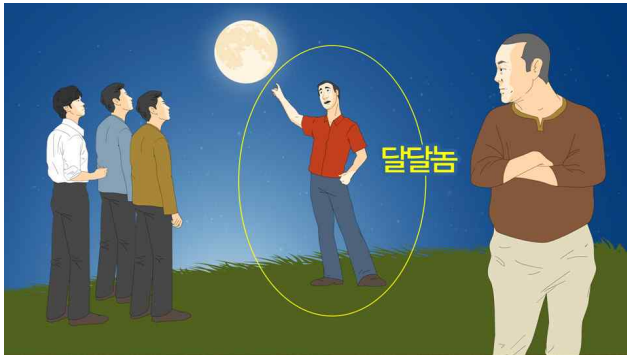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즉 사회권을 부여할 때 좀 더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을 통속의 인간으로 보고, 이 인간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언권과 조건을 공유하는 것이다.

달달눔과 시민권력

독일시민들은 왜 파시즘을 지지했을까? 전후 독일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 그 결과 독일 시민들이 달달눔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가운데 사람이 사람들에게 달을 가르키며 보라고 하고 있다. 달을 가르키며 달을 보라는 이 자를 달달눔이라고 칭해보자. 사람들은 그가 가르키는 달을 보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람은 달이 아니라 달달눔을 보고 있다.

“왜 달을 보라고 하지, 달을 보면 누구에게 유리하지, 이것을 통해서 저 달달눔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림 3] 달달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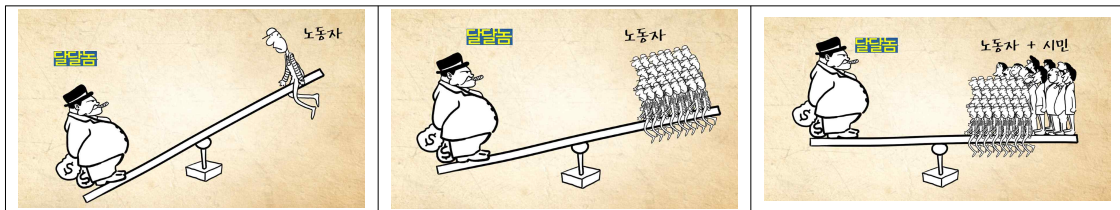
한마디로 달이 아니라 달달눔을 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히틀러와 괴벨스를 보지 않고 그들이 가르키는 달을 본 것이다. 그래서 전후 이들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안을 만들고 실천했다.

첫째,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다.
셋째,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통을 보고 이 통을 정당화하는 달달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통과 달달눔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민주시민교육은 혼자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림 4] 달달눔과 시민들



[그림 4]에서 왼쪽 그림은 혼자서 달달눔에 맞서는 것이다. 청소년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런 권력상황에서 자신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취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처럼 단결해서 단체교섭으로 말하고, 갈등이 생기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것을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권리로써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사회권을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고 실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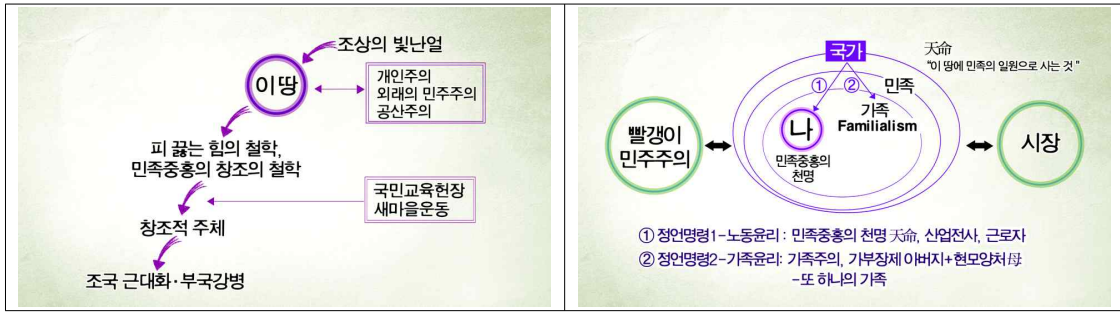
3. 민족중흥, 인성교육 그리고 성공한 개인으로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사회권을 보장한 통과 이 통이 가능할 수 있는 시민권력을 가져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권이 권리라는 것과 이 권리가 가능한 기초가 시민들의 연대에 기반한 권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학습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민주시민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국민교육헌장이고, 오늘날 인성교육, 그리고 인문학과 정의론 교육이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다. 국민교육헌장은 1990년대 폐지되기까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실천지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국민교육헌장은 지식인 그룹에 의해 기초되고 정초되었는데, 특히 서울대 철학과를 만든 박종홍교수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4] 국민교육헌장의 설계도면



국민교육헌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 ”

[그림 4]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박종홍은 우선 이 땅을 볼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주의와 외래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 땅에서 국민교육의 설계도면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그릴 때 조상의 빛난얼을 참조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이 정신을 체현한 존재가 화랑도이다. 이 얼에 기대어 피끓는 힘의 철학인 민족중흥의 창조의 철학이 나와야 한다. 이 철학에 의해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주체가 창조적 주체이다. 창조적 주체는 민족중흥을 체현한 존재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이다. 이 주체들이 모여 조국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다.

박종홍의 철학은 국민교육헌장으로 구체화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은 ‘이 땅에 민족의 일원으로 사는 천명을 타고 태어난 나’이다. 이런 민주시민은 민족의 천명 즉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윤리를 체현한 존재이다. 또는 이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족윤리를 체현한 존재이다. 이처럼 국민교육헌장은 노동윤리와 가족윤리를 체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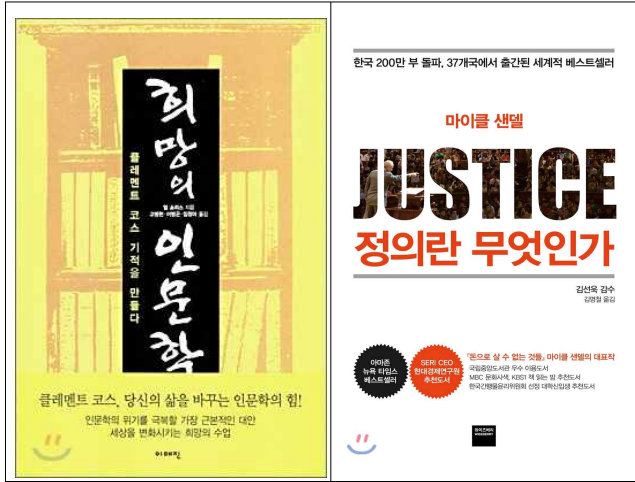
국민교육헌장에서 민주시민은 국가에 대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민족중흥에 헌신하는 것을 천명으로 산업전사와 가부장제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민주주의가 자유권과 사회권을 요구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

인성교육과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국민교육헌장의 민주시민은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경제위기로 해체되는 듯이 보인다. 우선 인성교육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말 그대로 시민적 덕성을 문제삼는다. 이 교육의 구도는 경쟁과 돈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가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 경쟁과 돈을 중시하지 않는 인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여기엔 통을 바꾸고 그 바꾸는 주체인 시민들의 집합적인 권력에 대한 구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시민사회에서는 인성교육보다 더 세련된

[그림 5] 인문학과 정의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문학과 정의론 교육이다. 인문학의 주요 텍스트가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라면 정의론 텍스트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이 교육은 도서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두 교육의 내용은 모두 통을 문제삼지 않는다. 희망의 인문학은 취약계층에게 시내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요구한다. 이 논리는 문제의 원인이 자립, 근면, 자조하지 않는 개인의 삶의 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시내 중심가 사람, 즉 잘 적응하는 사람은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으로 전제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도 공동체의 텔로스를 시민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장한다. 텔로스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지향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그는 이 맥락에서 시장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형태, 즉 장기매매, 대리모출산, 대신줄서서 티켓 끊어주기 등을 비판하지 시장의 불평등을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가 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 봐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얼 쇼리스와 마이클 샌델은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보았다. 이것은 통과 불평등, 더 나아가 달달눔을 극복할 집합적인 시민권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계급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시민교육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민교육현장의 민주시민은 분명 민주화를 거치면서 극복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과 인문학, 그리고 정의론은 과연 달달눔에 맞서는 것일까, 더 나아가 사회권을 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성공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민주시민교육은 누구의 편인가?”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보편적이면서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교육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주장도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교육현장, 인성교육, 인문학, 정의론 등은 관점에 따라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갈등적일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인간다운 조건을 권리로 규정할지, 그리고 그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교육현장처럼 위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주어져서는 이 갈등이 억압되고 봉합될 뿐이지 해소되거나 합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상을 제시하고 이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갈등과 토론의 광장을 만드는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통을 이해하고 이 통이 시민들의 삶을 더 넓고 더 깊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이제부터라도 이 권리는 달달놈에게 함께 맞설 수 있는 시민력을 가질 때 획득될 수 있기에 사회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시민교육인지, 누구에게 어떤 민주주의인지,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논의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록>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노동의 인문학을 위하여¹⁾

1. 상이한 풍경과 궁금증

열풍지대와 무풍지대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90년대 중반 인문학의 위기론이 본격화된 이후 급기야 2006년 서울지역 인문대학장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던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인문학 강좌와 프로그램이 도처에 존재한다. 대학은 물론이고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TV, 라디오 등에서 인문학 강좌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제, 의제 21 등 인문학과 무관해 보이는 곳에서조차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문도시'라는 말도 흔한 용어가 되었다. 가히 인문학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학이 만나는 대상도 다양하다. 노숙자, 재소자, 한부모가족, 기업의 CEO, 주부, 장애인, 자원봉사자, 여성 등을 만나기 위해 인문학은 오늘도 활발히 다니고 있다.

어떻게 이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까?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인문학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인문사회기초연구를 지원하고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문대중화를 위해서는 인문강좌, 인문축제, 포럼, 인문도시선정과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독서활동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과 박물관과 연계하여 인문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정모, 2013: 2-3).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인문학을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즉 정부는 인문학을 창조경제의 견인차와 국민행복의 전도사로 간주하면서 여겨지면서 2014년 인문학 예산을 15% 정도 증액했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 신설하고, 그 안에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특위의 주요 미션은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재조명,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 한국문화의 국내외 확산이다(김기봉, 2013. 11. 29).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강남구청의 '수요인문학 강좌', 소파구청의 '대하소설로 배우는 인문학강좌', 영등포구청의 '동네인문학' 등 지자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노력의 저편에서 또 다른 인문학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직전부터 일부의 인문학자들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었다. 2005년 성프란시스 대학

1) 본 글은 유범상(<시민사회와 NGO> 13권 제1호, 2015)의 글임.

의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2007년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수용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이 개설되었다. 이후 제도밖의 연구공간 수유+너머, 철학아카데미, 푸른역사아카데미, 대안 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데모스, 파이데이아,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인문학 협동조합,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 등이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오창은, 2013; 시사IN, 2013. 12. 10). 이들은 반(半제)도비평가(오창은, 2013), 거리의 인문학(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불온한 인문학(최진석 외, 2011), 싸우는 인문학(강양구 외, 2013), 실천인문학(고영직, 2010) 등으로 자신과 인문학을 규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인문학의 열풍이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감화’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인문학 배우기에 열심이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열풍의 진원지를 보도하고 있다. “2005년 즈음, 인문학 열풍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바람은 두 곳으로부터 불어왔다. 하나는 대학 강단 인문학과 대별되는 대안 인문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경영계였다”(동아, 2011. 3. 14.). 이처럼 자본의 영역에서 인문학이 나타나서 열풍으로 변한 것은 의외일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인문학을 입사요건을 넣고 있다: “올해 신입사원 10-15%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도 인문학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인문학도를 거의 뽑지 않았다.”(현대건설 홍보실 박원철 과장) 실제로 2010년 현대건설 관리·사무파트 신입사원 30명 중 15명, 2011년 43명 중 13명이 순수 인문계열 전공자다. 원래는 경제·경영·법학과 출신이 100%였다. 현대건설은 올해에도 신입사원 10-15%를 인문·사회계열에서 뽑았다(동아, 2011. 3. 14). 현재 대기업은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위 ‘아이폰 인문학’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문학 위기가 이제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경향신문, 2013. 8. 18).

이상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오늘은 인문학의 열풍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인문학의 무풍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믿겠는가? 그곳은 노동운동의 영역이다.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인문학에 자신감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홈페이지에 인문학에 대한 언급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실제 노동조합의 교육에 인문학이 고려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인문학의 본성이 자본주의, 권력, 진리, 상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의 인문학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왜 자본의 인문학이 열풍인 반면 노동의 인문학은 무풍지대일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인문학은 중립적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노동의 인문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본 논문의 연구물음이다.

계급갈등에서 인문학은 중립적일까?

한국의 인문학의 열풍과 무풍의 사이에서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난다. 그것은 인문학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인문학은 계급갈등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천만명 가까이 관람했던 설국열차는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 결국 지구를 온통 빙하기 설국으로 이끈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끊임없이 달리는 설국열차 뿐이다. 하지만, 열차는 차별의 공간이다. 바퀴벌레를 원료로 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빈민굴의 꼬리칸과 호화로운 객실의 술과 마약까지 즐기는 앞쪽칸이 대비된다. 앞쪽칸의 절대 권력자 윌포드는 이 질서가 조화로운 것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

티스는 이 질서의 전복을 꿈꾼다. 그는 막아서는 진압군을 뚫고 중간칸을 지나 앞쪽칸으로 전진한다. 이때 남궁민수로 분한 송강호는 기차 밖으로의 일탈을 꿈꾼다. 코리칸과 앞쪽칸의 사람들은 서로 '좋은 놈'이지만 상대는 '나쁜 놈'이다. 한편 남궁민수는 '이상한 놈'이 된다.

인문학은 인간과 공동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월포드와 커티스 그리고 송강호처럼 인간의 처지는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하워드 진의 책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무서운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 위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기차에 탄 것 자체가 이미 특정 목표와 방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므로 '기차 위에서 중립적인체 객관을 가장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비판한다(Zinn, 2002). 선거불참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기 때문에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결과를 방조함으로써 그 결과에 조력자가 된다. 데모를 할 때 학생과 전투경찰의 폭력성을 들어 둘 다 자제하라고 한다면 그는 중립일까? 학생이 데모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향의인데, 양쪽 다 조용히 하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중립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중립적이라 말하거나 중립적인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립성을 가장하여 자신의 당파성을 관철하거나 중립성 신화에 속은 무지한 사람일 것이다. 하워드 진은 교육과 교과서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교과서가 그 부피와 지루함으로 제아무리 중립을 가장한다 해도, 교사가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은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주장을 담은 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Zinn, 2008: 130-131). <부자들의 대통령>에서 미셸 팽송은 "지배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지배체제와 본의 아니게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한다(Pincon, 2012). 이처럼 인간의 일에 관여하는 인문학은 중립적일 수 없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겐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설국열차를 보자. 앞 칸의 월포드와 뒤 칸의 커티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문학 책을 추천할까? 아마도 월포드는 이 질서가 정당한 것이고 너희들은 불행은 운명이며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책이 아닐까? 현실을 잊게 하는 교양도서를 추천할 것이다. 그는 간혹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뒤 칸 사람들이 현실을 잊게 하고 싶을 것이다. 월포드의 CEO 인문학은 세련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영감을 얻는 도구이다. CEO인문학이 계급문제와 노사갈등문제해결에 관심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월포드의 노숙자 인문학은 빈곤과 실업의 구조적·정치적 원인을 다루기보다 개인적 힐링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의 인문학, 개인치료의 인문학, 교양교육의 인문학의 열풍이 커티스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한편 또 다른 인문학이 존재할 수 있다. 커티스는 자신의 민중들이 월포드의 지배체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구조를 전복하려는 지침으로써 인문학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은 마르크스의 철학이라든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와 독재자라든가, 프롬의 <인간의 마음>과 파농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문학작품을 읽게 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서를 탈주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문학은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 제안은 '우리'의 전통과 '인문학'을 '위대한 작품'과 쉽게 동일화하지 말자. '다른' 전통들, 그러므로 '다른' 인문학

도 존재한다”고 말한다(Said, 2012: 21). 두 개 아니 그 이상의 인문학은 누군가에 의해 취사 선택되어 마치 교양도서인 것처럼 포장지를 두르고 사람들의 책상위에 올려진다. 중립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호명되는 것이다. 인문학의 이면에는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항상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문학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계급 갈등, 커티스와 월포드의 대립에서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2. 헤게모니와 인문학

헤게모니와 인문학의 정치

지배와 통치는 물리적 권력(힘)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지배에서 실현되고 지속된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언급했는데, 이때 투쟁의 핵심적인 영역은 이데올로기 이고, 헤게모니이다. 지배의 헤게모니는 항상 보편적·자연적·합리적인 것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어떤 시대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라고 말한다. 즉 ‘혁명적 사상의 출현은 이전의 보편적 사상, 즉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특수한 것으로 전락시킨다’다고 보았다(Marx and Engels, 2007). 그람시는 이 생각을 헤게모니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헤게모니는 특정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편적이 이익으로 믿게함으로써 다른 계급을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정치적·지적·도덕적 리더십이다(Gramsci, 2006). 이렇게 볼 때, 중세는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신의 명령이라는 의식을 통해 정당화했다. 신은 진리자였고 정치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의 뜻을 전달하고 예지하는 선지자가 필요했다. 이때 교회와 귀족제는 이것을 전파하는 제도였다. 물론 이 관념을 의심하는 자는 진리의 이름으로 제거되었다. 제거의 힘은 폭력과 물리력이었다. 따라서 진리는 항상 물리력을 동반했다. 근대가 되면 국가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한다. 베버에 따르면 국가이성은 합리화이다. 합리화는 관료제와 합법적 폭력으로 장착된 국가에 의해 정당화된다. 국가이성이 진리에 자리에 오른다. 국가이성은 국민을 호명하고 사회를 조직한다. 국가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집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의 조직된·체계화된 형태가 이념이고,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생각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폭력을 수반한 당파적인 것일 수 있다. 남의 진리를 허위로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올리려는 한에 있어서 생각은 항상 당파적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식 또한 그렇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런데 상식이라는 썸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 및 이념이라는 저수지에서 나온다. 지식, 역사, 상식 등은 권력관계의 산물이다. 이들 이면에는 어떤 권력, 즉 국가이든 자본이든지 그것의 의지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과 상식은 교양이 아니라 지배의 무기이고 정치의 아레나이고 생사의 바로미터이다. 그렇다면 헤게모니와 인문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인문학이 비판과 성찰을 자기정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인문학이 ‘우리’가 이미 알고 느끼는 것을 다시 확인해 공고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품화되어 무비판적으로 코드화된 확실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소란을 일으켜 재정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aid, 2012: 50):

인문주의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모든 계급과 환경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며, 또한 끊임없는 상기와 발견, 자기비판, 해방의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인문학이 곧 비판이며, 이 비판이란 대학 안과 밖의 사건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Said, 2012: 42).

이 맥락에서 인문학의 기본적인 준거로써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등에론이 제시된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 진리추구의 시작이라고 보고 상대가 무지를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는 소등에 착 달라붙은 쇠파리같이 아테네의 등애가 되어 당대 그곳의 개인과 공동체를 물어 뜯었다(Platon, 1999).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비판은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자유주의 철학의 아버지 밀도 성인 추대식에서 곧 성인이 될 사람을 비판하는 ‘악마의 옹호자’를 옹호했다(Mill, 2005). 이상에서 보듯이 소크라테스와 밀과 같은 인류의 선각자들은 비판과 토론을 개인과 사회의 실수를 교정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으로 인식하였다. 밀의 악마의 옹호자와 소크라테스의 등에 그리고 산파는 비판과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항상 그 시대의 진리, 상식, 헤게모니를 문제삼는 불온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의 계기를 만든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을 살펴보자. <희망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빈곤을 단순히 복지의 시혜나 직업훈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삶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빈곤층이 정당한 권리를 지닌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문학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얼 쇼리스의 인문학은 권리의 주체와 정치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인문학은 불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그가 테니스 코트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부자 아이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엿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테니스 코트의 사례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부자와 빈민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은 정치적이 아니다. 그들은 질서와 자유 사이의 중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무력이라도 행사하려고 했다. 테니스 배우기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력의 무질서 속에서 잃어 버렸다. 가난한 아이들은 테니스 코트에 자신들의 상황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신들의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들은 정치적 규칙보다는 무력의 법칙에 따라 반응한다. 무력이야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Shorris, 2006: 61).

이처럼 얼 쇼리스에게 정치적 삶은 현실의 질서, 규칙, 법규를 잘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빈곤층은 ‘미숙한’ 시민이어서 그 질서에 소외되어 있다. 인문학을 그들을 그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기태는 <희망의 인문학>이 소외계층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 또는 스펙 업그라이드에 그치고 있으며, 자신에게 할당된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 어떤 정치적 삶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희망의 인문학>은 지배자의 입장에서선 손해 볼 것이 없는 힐링에 더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손기태, 2011). 그런데, 이 규칙과 질서를 그대로 놔두고 꼬리칸의 사람들은 과연 행복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얼 쇼리스의 희망은 체제에 적응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혁명가에게 있어서 이 인문학은 절망의 인문학이 아닐까?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이 비판과 성찰을 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비판이 누구의 무엇을 향하는지, 그 성찰이 어떤 내용의 성찰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국열차에서 커티스가 보기에 윌포드는 인문학을 헤게모니와 규율통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자리에 있다. 특히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헤게모니의 수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항헤게모니의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다.

인문학, 정치의 옷을 입다: 힐링의 인문학과 필링의 인문학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는 말이다. 즉 누군가에게 희망을 누군가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는 말을 타고 질주하던 두 인디언의 비유에서 상이한 종류의 인문학을 유추할 수 있다.

말을 타고 질주하던 지친 인디언이 갑자기 멈춰 섰다.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니 너무 지쳐있다. 그래서 이 인디언은 잠시 멈춰 서서 영혼을 돌보기로 결심한다. 이 '지친 영혼'은 성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성찰은 쉬면서 자신을 돌보고 충전하는 것이다. 음악이 주는 평온과 소설의 상상력 그리고 역사와 철학의 새로운 지식이 성찰을 위해 동원된다. 소위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재료들은 이런 지친 현대인을 쉽고 성찰로 인도하는 안식처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인문치료로서 힐링(healing)의 인문학이 된다.

이 인문학은 개인을 배려하는 성찰의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본 글은 이 인문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를 두 번째 인디언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인디언은 질주하다가 말에서 동일하게 내린다. 하지만, 이 인디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말을 쳐다본다. 경주마는 모두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린 것이다. 이윽고 인디언은 말의 눈가리개를 벗긴다. 이처럼 인디언이 자기 영혼이 아니라 말의 눈가리개를 문제삼아 벗긴다(peel)는 의미에서 이것을 필링(peeling)의 인문학이라고 하자. 미셸 푸코는 어디에선가 누군가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보라고 권고했다. 달에 계수나무가 있는지, 누가 제일 먼저 달나라에 갔는지를 상상하지 말고, 왜 그 '놈'이 달을 보라고 했는지, 달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즉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진리로 알고 따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푸코의 충고에 따르면, 말을 멈춰 세우고 내 영혼이 오길 기다려서 위로하기도 하지만, 누가 나[의 말]를 이렇게 빨리 달려오게 했는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누구의 이득이었던지도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눈가리개를 씌운 자, 채찍으로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세운 자가 누군지를 찾아 내야한다. 이때 인디언의 성찰은 달리다 지친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보다, 나를 어디론가 지속적으로 몰고 간 자에 대해 비판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힐링의 인문학은 개인의 내면문제에 집중한다.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교양을 통해 개인의 심리치료를 위해 노력한다. 즉 여성, CEO, 중산층, 노숙자,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고전·문학·철학·역사 등의 영역에서 교양교육을 통해 위로하고, 정서적·심리적 인문치료를 진행한다. 이때 인문학은 대중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거나, 고급교양교육과 사교의 장을 만드는데 관여한다. 계몽, 교양, 치료, 위로와 위안을 목표로 하는 이 인문학에는 권력, 정치, 계급, 억압 등이 빠져 있다. 한편 필링의 인문학은 ‘지친 나’에 대한 위로, 더 많은 자본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보다 고급스런 교양습득 등을 넘어서서 나를 지치게 한 숨겨진 압제를 문제 삼는다. 이것은 지식과 상식으로 치장한 숨은 권력을 드러내고 이것을 지지해 온 견고한 제도와 구조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필링의 인문학은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자신의 눈가리개를 문제삼고 벗기는 가운데 내가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틀 속에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의 관계 속에서 인문학의 지평을 바라보게 한다. 내 눈가리개를 문제삼고 벗기는 가운데 내가 개인의 치유, 교양, 지적 자극이라는 틀 속에서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서 구조, 계급, 변화, 정치의 연관 속에서 나의 지평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학은 개인 이해와 힐링을 넘어서 공동체의 갈등의 구조와 권력관계를 필링한다. 힐링은 힐링 자체로 힐링되는 것이 아니라 필링을 통해 구조와 권력관계를 변형시킴으로써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필링의 인문학은 단순히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인문학과 노동운동의 운명적 만남

필링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권력관계를 문제삼는다. 이것이 가장 압도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공장감독관의 보고서,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현실의 생생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착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귀부인의 옷을 만들기 위해 3일 밤낮으로 일하다 사망한 여공 앞에서 귀족 부인은 여공의 죽음보다 파티복이 없어 걱정하는 모습을 그린다(Marx, 2004). 이런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노동자와 자본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를 고발하면서 마르크스는 철학이 이제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일갈한다(Huberman, 2011). 막심 고리키의 소설 <어머니>는 파벨과 그의 어머니를 통해 마르크스가 고발한 자본주의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전복을 그리고 있다(Gorki, 2008). 고리키의 문학은 자본주의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적대적이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그리는 불온한 것이다. 이런 불온한 것은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에서도 나타난다. 그동안 콜롬부스와 건국의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역사책에 대해 이 책은 기존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계급 등의 민중들의 목소리, 지워진 기억, 지배층의 헤게모니 등을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해 낸다. 이제 콜롬부스는 인디언에게 침략자와 학살자로 재규정된다(Zinn, 2008).

이상에서처럼 철학, 역사, 문학 등은 자본주의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노동운동과 자연스럽게 조우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공장노동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의식화 교육의 일환으로 보여준 영화가 있다. 그것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이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이 영화는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였다. 공장 강당을 순회하며 상영

을 한 지 6개월 만에 1000회가 넘는 상영회에 4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관람했는데, 급기야 베네수엘라 사용자단체연합은 같은 해년 6월 정부에 공식적으로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 2006년에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을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하게 만든 이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1936년 미국에서 첫 상영되었을 때, 역시 미국의 자본과 권력을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다(임승수, 2014). 이처럼 찰리 채플린은 영화를 통해 자본과 권력을 비판했다. 그는 공장 내부의 모습을 고발한다. 축사로 끌려 가듯이 공장에 끌려 간 노동자, 그 속에서 기계의 부품이 되어 정신없이 일하는 노동자, 식사시간이 아까워 자동급식기계를 만드는 자본가, 스크린을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자본가 등 자본주의의 모습과 계급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상에서 보듯이 비판과 성찰을 자기본분으로 하는 인문학은 자본주의를 문제삼는 순간 노동운동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인문학은 때론 저항의 철학적 무기가 되기도 하고 대항해게모니의 진지가 되기도 하며, 세력화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불온한 인문학의 주체들은 불온한 사람으로 빨갱이로 호명되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했다. 마르크스, 찰리 채플린, 막심 고리키와 하워드 진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런 경향은 필링의 인문학, 불온한 인문학 실천 인문학처럼 기본적으로 일체의 권력을 문제삼아 변화를 꿈꾸는 인문학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문학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다음 절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인문학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3. 인문학과 한국사회: 노동없는 '연구비 수주형 인문학과 관주도 행사인문학'

인문학 연구: 힐링의 과잉과 왜소한 비판의식

2006년 전국 80개 인문대학장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다. 2007학년도 서울의 7개 주요 대학에서 폐강된 교양 강의 158개 중에 70%가 넘는 114개가 인문 사회계열 강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인문학 살리기운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매년 400억을 투자하는 인문한국(HK)사업을 시작했고, 인문강좌 등을 통해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이후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인문학은 전성기에 접어 든 듯이 보였다. 시민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서관, 회사, 복지관의 다양한 공간에서 CEO, 노숙인, 주부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인문학이 퍼져나갔다. 인문학 분야와 담론도 풍부해졌다. 이때 인문학 관련 대중서가 다양한 이름을 달고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어 인문경영²⁾, 소통의 인문학³⁾, 도시인문학⁴⁾, 생활속 인문학⁵⁾, 아이폰 인문학⁶⁾,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인문치료, 광고 인문학, 연애

2) 예를 들어 <인문에서 경영의 지혜를 배우다: 논어의 가르침에서 경영의 해법을 찾다>(상루. 황보경 역. 2013. 평단문화사),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정진홍. 2007. 21세기 북스), <인문경영으로 리드하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신동기. 2011. 엘도라도) 등의 책과 인문경영연구소 등도 있다.

3) 예를 들어 <소통의 인문학: 인문학 전문계 고등학생을 찾아가다>(박구용 외. 2010. 전남대학교출판부), <행복한 인문학: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인문학 수업>(임철우 등. 2008. 이매진), <소통기계와 네트워크 인문학>(임정택 외. 2011. 연세대학교출판부), <인문학소통과 공생의 지혜>(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0. 글로벌콘텐츠) 등이 있다.

4) <글로벌 플리스의 양가성과 도시인문학의 모색>(서울시립대학교도시인문학연구소 등. 2010. 메이데이), 도시인문학연구(메이데이 발행저널) 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등이 있다.

인문학, 팬티 인문학 등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화려한 수사와 함께 전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모든 길은 인문학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문학은 위기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오창은은 <절망의 인문학>을 통해 한국의 인문학에서 희망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문학 현장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희망의 인문학의 현장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단호하게 절망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절망을 호황의 절망, 내부의 절망, 제도의 절망, 약소자의 절망으로 범주화하고 분석하고 있다(오창은, 2013). 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정부의 인문학 부흥을 위한 노력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 문학·역사·철학과는 경쟁력 없는 학과로 치부돼 통폐합되고 ‘골프와 비즈니스’ ‘취업역량 개발’ 등이 새로운 교양과목으로 각광받고 있는가?

현실의 인문학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문정책이다. 이들은 정부의 인문학 정책이 오히려 인문학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이성훈(2012)의 ‘연구비 수주형 인문학과 관 주도 행사인문학’에서 응집적으로 표현된다. 그는 인문학이 관주도로 바뀌면서 인문학과 인문학자가 연구비 수주를 위해 인문학을 활용하면서 인문학은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문대중화사업은 행사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비판론자들은 한국연구재단 등의 계량적 성과 위주 학문지원 시스템은 오히려 자본에 의한 학문 식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은 다음과 같이 지속된다: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인문도시와 인문강좌사업에 뽑힌 동양대는 전통선비문화와 현대 인문학의 융합으로 영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칠곡군도 지역 인문학을 미래 성장동력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문’을 내세운 도시 또는 마을 사업은 융복합 개념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함께 녹아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예전 생태도시(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의 구조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성훈, 2012).

강명관은 <침묵의 공장>에서 인문학을 공장과 비교하여 비판한다. 공장은 어떤 이미지인가? 현대의 공장은 “거대하지만 기계음이 들리지 않는다. 조용하다. 먼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는 청정하게 관리되고 노동자들은 제복 혹은 방진복을 입고 있다. 말도 필요없다. 모든 것은 자동화되어 있다. ‘노동쟁의’는 고어사전에서 찾아볼 단어가 되었다.” 이런 공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침묵”이다(강명관, 2013: 11). 강명관은 국가, 자본, 테크놀로지의 지배의 트라이앵글이 지배한다고 보면서 인문학도 이와 같은 구조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5) <길위의 인문학: 현장의 인문학, 생활속의 인문학>(구효서 등, 2011. 경향미디어).

6) 기업 주도의 인문학은 ‘아이폰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경영, 기술개발, 신입사원 공채 등 여러 부문에서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영향이 크다. 잡스는 신제품 아이패드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기술과 교양과정, 인문학의 교차로에 애플이 있다”고 말했다. 잡스가 리드대 철학과를 중퇴한 사실도 회자됐다. 인문학총연합회가 지난 4월 개최한 ‘한국의 인문 진흥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언급된 인물 중 하나가 잡스였다. 아이폰 인문학의 핵심은 잡스가 추구하고 실현했던 융복합이다(경향신문, 2013. 8. 19).

문제는 한국의 인문학이 권력과 자본에 ‘자발적 노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문학은 이제 국가의 ‘관리’하에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부탁을 받은 국가는 관리기구를 작동시킨다. 교육부는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교육과 대학에 강제하는 기관이고, 한국연구재단은 ‘지원’을 통해 학문을 관리, 통제하는 기관이다. 실로 부끄러울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인문학은 훌륭히 관리, 통제될 수 있다(강명관, 2013: 18-19).

이처럼 <침묵의 공장>은 인문학이 자발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공모관계에 들어 갔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인문학은 자신의 비판과 성찰의 본성을 잃고 연구비 수주형의 인문학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를 <불온한 인문학>의 저자들은 ‘인문학의 좀비화’로 표현한다. 인문학은 “국가와 자본의 월급쟁이가 되자마자 권력과 돈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봉해진 산송장”이 되었다고 비판한다(최진석 외, 2011: 14).

한편 거리에 나온 인문학에서도 인문학의 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인문학은 비판과 성찰이다. 이 비판과 성찰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실의 변화에 개입하는 것을 중요한 자기의 존재론적 본성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은 개인의 힐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소외와 고독,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피로해진 현대인에게 쉼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한다. 더 나아가 인문학은 특정 개인들을 겨냥한다. 노숙자, 재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이다.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선정된 시민인문강좌 사업에서 ‘취약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를 위한 철학 강좌’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송기동, 2012: 529). 이 맥락에서 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 말하고 있다:

열심히 살았지만 기초수급자, 장애 6급, 유방암 수술 등 늘 실패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강좌를 신청했고, 동 강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진솔한 소감은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왜 절실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송기동, 2012: 529)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은 사회복지가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초생활비 지원이나 단순노동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같은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시정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킨다면 투입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권한다(전봉주, 2011: 28-29).

더 나아가 인문학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보완으로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울형 복지란 이름으로 고안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희망의 인문학’이란 프로그램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란 ‘기업가정신’을 통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저 악명 높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복음이 스며 있다. 복지(welfare)라는 개념을 대체한 노동연계복지라는 번역하기 곤란한 신조어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회연대 원리에 근거하여 위협에 대처하는 책임을 공유한다는 종래의 복지를 철두철미 개인화

한다. 급여, 후생, 복지 같은 ‘사회적인’ 테크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창업, 교육, 훈련같이 기업가처럼 행동하는 개인을 제한 지원하는 신종 복지 테크닉이 들어선다. 인문학은 바로 그런 개인과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윤리로 자리 잡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기업가적인 인물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서동진, 2013: 25).

이처럼 인문학은 정부에 종속되거나 힐링에 몰입하면서 비판과 성찰이라는 본래의 인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카우프만은 모든 가치에 대해 비판하고 진리에 근접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에토스(정신)가 우리 시대 인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Kaufmann, 2011). 하지만 대학은 취업률과 입학률에 몰두하고, 거리로 나온 인문학은 인문치료의 인문사회복지 영역을 개척하고, 정부의 ‘인문정신문화’는 순응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힐링의 과잉과 왜소화된 비판이 오늘날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인 것이다.

자본의 애장품이 된 노동없는 인문학

앞서 인문학은 노동운동과 친화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학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여 대항해게모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인문학은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자본주의와 인문학이 불화를 일으키기 보다 매우 친화적이라는 사실이다. 인문학은 스펙쌓기와 돈벌이에 유효한 매우 실용적인 존재이다. ‘부자 되세요’처럼 인문학이 처세나 자기계발, 스펙, 돈벌이로 취급되고 있다. 이 근원은 한국의 자본이다:

자본은 인문학의 유용성을 묻는다. 그것은 인문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윤을 낼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며 좀더 거룩하게 말하자면 자본의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어떤가, 후자로 갈수록 뭔가 ‘학문적’으로 들리지 않는가(강명관, 2013: 36).

어디로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을까? 얼마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했던 연설에 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liberal Arts)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 잡스의 인문학 사랑은 이전부터 많이 인용되었다. 검색창에 아이패드 또는 스티브잡스와 함께 인문학을 치면 “애플 따라 가려면 인문학을 해라.”, “입양아를 바로 키운 것은 인문학.”, “붓글씨(인문학)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폰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등등 다양한 글이 검색된다. 결국 우리도 ‘잡스처럼’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문화, 2011: 40). 한국의 자본은 자본의 사도를 따라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복귀 일성은 다름이 아닌 ‘관리의 삼성에서 창조의 삼성으로’였고, 구본문 LG그룹 회장은 2010년 경영 화두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시했으며, 윤석금 웅진 그

롭 회장은 ‘끊임없는 혁신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며 ‘창의 경영’을 주장했다. 바로 이들의 ‘창조 경영’에 ‘인문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사장뿐 아니라 임직원이 ‘서울대 인문학 최고위 과정(AFP)’을 의무적으로 수강한다.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유통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CEO 인문학을 수강하고 나서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사람들 생각의 뿌리가 인문학이다. 뿌리를 알면 생각에 어떻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자인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디자인 업체 CEO) “박연폭포를 보면서 샤워기를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목욕탕용품 전문 업체 CEO) “백화점 고객은 상품을 사러 오면서 ‘사랑’, ‘풍요’, ‘자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요구한다. 이를 읽어내는 통찰력은 인문학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길러진다.”(쇼핑 업체 대표)(문화, 2011:40-41). 2009년 KB국민은행은 ‘KB 레인보우 인문학’이라는 인문학 웹진을 시작했다. … 기업은 적은 돈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고객들은 공짜로 인문학 칼럼을 읽으며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 2011:44-45).

이제 인문학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문학 소비의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문화, 2011:43). 이런 맥락에서 인문학은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일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문학적 바탕없이 창조경제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함께 갈 것을 주문했다(국민일보, 2013. 8. 7).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헤리포터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이제 자본전략이 되고 있다. 문강형준(한겨레신문, 2013. 8. 9)은 ‘인문학이라는 쓰레기’라는 칼럼에서 인문학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략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문학은 자본의 애장품이 되어 왔다. 대학이 이에 화답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한 ‘CEO 인문학 최고위 과정’을 필두로 인문학 위주 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대학들이 인문학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할까? 우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경영 담론은 이제 전과 같은 경직되고 지루한 지식의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경영 담론은 거의 모든 인문학을 아우를 뿐 아니라 인문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수용한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인문학이 그럴 듯한 포장지이자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를 왜곡하는 유효한 도구라는 점이다. 빌 게이츠나 잡스는 억만장자 자본가이기에 앞서 히피 성향의 괴짜에 외곬수, 반사회적인 인물로 표상된다. 그들은 닷컴 열풍을 이끈 벤처 자본으로, 장래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자본가는 이제 창의적인 예술가란 가면을 쓴 모험적인 사업가로 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잡스는 애플의 혁신적인 상품은 전적으로 인문학적 발상에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잇달아 자살을 택한 폭스콘 노동자들은 애플 제품을 이야기하는 데 언급되지 않는다. 상품이라는 사물은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하고 디자인한 인물들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서동진, 2013: 22-23). 이처럼 기업이 인간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이미지화하는 데 인문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Shorris, 2006: 28). 이와 관련하여 고영직은 인문학이 이른바 ‘감정 자본주의’의 문화적 형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문학이 치료의 기능을 하며,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을 위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안과 밖을 막론하고 오늘날 인문학이 일종의 자본주의적 순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서동진)의 탄생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고영직, 2010: 163-164).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인문학은 상품생산의 도구이고 상품판매의 포장지이다. 또한 인문학은 세상살이의 처세술이다. 특히 그것은 자본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다. 최근 인문학 분야의 인기도서 중 하나인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노골적으로 인문학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0.1퍼센트의 인문고전 독서법'이다. 즉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인문학이 등장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자본에게 딱 맞는 매우 품위있고 실용적인 옷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은퇴한 노동부 고위 관리는 인문학을 유별나게 사랑한다:

요즘 기업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는 어릴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창의성 교육은 인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이어야 하고, 여행과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업에서도 국가 경쟁력의 큰 원천인 창의성 함양을 위해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세곤, 2012).

이처럼 인문학은 제품개발과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상품이다. 또한 인문학은 노동에 대비되는 품격과 품위의 장식물이다.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해외여행 TV프로그램도 보고 명작 스캔들 같은 프로도 감상하면서 품격을 높인다.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미술관·박물관을 다니고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고전을 독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인문학은 노동을 해방시킨다. 재충전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또한 노동의 질도 높아진다. 인문 정신의 고양·회복은 바로 인간존중이다. 휴머니즘은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김세곤, 2012).”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노동'으로 표현한 고된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거나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충전의 요소이다. 즉 노동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매개나 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진영이 인문학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가끔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알리곤 한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의 뜻은 분명하다. '공장, 사무실에서 고된 노동을 한 이들이 퇴근 후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술집에서 시시덕거리는 것보다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사람을 바꾸는데 무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걸까? 차라리 그 시간에 좀더 실용적인 강의, 예를 들자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 혹은 '노동자를

위한 건강교실'따위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강양구, 2013: 218).

이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인문학 강좌는 자본이나 중산층의 한가한 놀음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인문학 강좌를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개설된 인문학 강좌도 힐링의 인문학의 또 다른 버전이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노조의 인문학 강좌는 '작은 집 큰생각'인데 필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주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13년 1월16일-2월 27일 개최된 인문학 강좌). 이런 점에서 강양구는 현재적 수준에서 인문학이 노동자의 진짜 무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강양구, 2013). 이 분위기라면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인문학의 무풍지대는 당분간 지속될 듯이 보인다.

4. 노동의 인문학을 위한 모색

설국열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민중혁명 지도자 커티스는 자신의 동료들을 희생해 가며 어렵게 앞쪽칸으로 전진한다. 드디어 지배자 윌포드와 대면한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윌포드의 지배는 커티스의 멘토인 길리엄과 공모한 것이고 심지어 혁명까지도 상의된 것이다. 길리엄은 혁명과 커티스의 멘토였지만 그도 윌포드와 함께 기차안의 인구증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해서 인구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생각은 아마도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흑사병, 전쟁, 기근 등을 긍정적으로 본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혁명을 꿈꿨던 민중지도자 커티스는 자신의 행동이 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이 같이 무지가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인문학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 비판과 성찰 그리고 상상의 유효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노동은 인문학을 경시해 왔다:

인문학이 노동자의 무기였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 ... 노동운동의 몰락을 언급하는 지금 이 시점에,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소통의 경험이다. 유럽의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초기의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민중의 집' 같은 공간을 만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강양구, 2013: 219).

이처럼 노동운동은 현재의 인문학을 계급의식이나 조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간과한 것이다. 우선 인문학 자체가 계급의식을 둘러싼 아레나라는 사실이다. 알튀세가 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도 동의를 통해 지배를 영속화한다. 현재 인문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의 생산자이다. 인문학은 계급이 아니라 개인이며, 필링이 아니라 힐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문학을 교양과 스펙을 위한 장신물로 보고 있다. 이런 인문학이 한국사회의 갈등과 모순에 중립적이라면 모를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식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듯이 자본의 인문학을 버리면서 인문학 자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문학을 노동자와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

으로 소비하고 있는 헤게모니의 숙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헤게모니는 인문학 즉 문화, 예술, 철학, 철학 등을 통해 행사된다. 이처럼 인문학은 헤게모니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노동의 인문학이 머물 수 있는 영토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의 인문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문학이 힐링의 방법이고 개인과 연관되고 실용적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문학이 권력과 자본주의의 비판이고 노동자 계급의식과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의 중요한 지렛대라는 것을 노동운동 내부에서 자각해야 한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인문학을 자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서 인문학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런 인문학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인문학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문학이 융성한 시기에 우리는 정작 가장 역겨운 형태의 역설을 대면한다. 이는 우리를 새롭게 주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인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인문학을 구제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 인문학이란 물신이야말로 사유를 중단시키는 미끼이기 때문이다(서동진, 2013: 26).

그렇다면 노동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의 인문학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전략이고 노동계급의 이익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만연한 힐링의 인문학과 그 신화를 비판하는 인문학이다. 즉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대안을 힐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자본주의에서 찾고 필링을 통해 새로운 상상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인문학은 우선 힐링을 넘어 필링으로 가야 한다. 즉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본과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계급관계에서 찾으려는 것으로서 프레이리가 말한 세계 읽기와 맥락읽기를 하려는 인식론적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Freire, 2013). 이를 위해 노동의 인문학은 첫째,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계급, 정치, 구조, 자본주의가 거세된 힐링 과잉의 인문학이다. 따라서 노동의 인문학은 정치의 옷을 입은 인문학이어야 한다. 즉 문학, 역사, 철학의 교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만난 인문학의 비판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인문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인문학은 자본과 힐링의 인문학에 맞서는 과정에서 사회인문학을 자신의 동료로 고려할 수 있다. 사회인문학은 “원래의 인문학이 총체적 학문으로서 지녔던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되살리는 것”(백낙청, 2010: 3)이다. 즉 사회과학과 맥락 속에서 인문학의 내용을 채워넣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자본의 인문학과 정부의 인문학에 저항하는 다양한 인문학의 흐름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현재 <불온한 인문학>, <싸우는 인문학>, <인문학협동조합>, <거리의 인문학>, <필링의 인문학> 등 다양한 비판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운동은 이들 인문학단체와 학자를 초대하여 인문학과 노동운동의 비판과 실천을 연결짓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교육과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중학교 아이들에게 ‘노동자는 000이다. 이 000에 답하라’고 물었다. 대답에 나온 것이 거지, 못배운 자들, 일개미, 장애인, 돈버는 기계, 강철인간, 중국인, 동남아 등이었다. 노동의 인문학은 인문학이라는 옷을 입고 노동조합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의 인문학은 성인교육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30만개의 스터디 씨클은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이다. 사회민주당은 이 스터디 씨클의 토론으로 인

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LO 산하 노동교육원이 100만명 규모의 시민과 조합원을 교육에 간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정치 세력화의 실패는 조직된 노동이 아니라 조직된 시민 즉 시민사회에서의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민교육과 성인교육을 매개로 해서 노동운동은 지역과 도처에서 소통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서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 노동의 인문학이 자본의 인문학과 대결해야 한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 즉 성프란시스대학(노숙인),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자활주민), 관악인문대학(자활주민), 늘푸른인문대학(자활주민), 노원성프란시스대학(노원9단지) 등에서 노동운동은 시민과 시민단체와 만나야 한다. 예를 들어 광진지역자활센터와 늘푸른돌봄센터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은 ‘광진주민연대’라는 지역 시민단체를 모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노동의 인문학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영직, 2010: 170-17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그것은 정부 주도의 인문학은 차지하고더라도 거리의 인문학도 힐링의 인문학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지배 헤게모니를 받아들여 스스로 권력과 시장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 원인은 노동운동이 인문학을 스스로 소외시켰기 때문이고 인문학을 노동의 인문학이라는 대항헤게모니의 전략으로 보지 않는 것에 상당부분 있다. 그 사이에 인문학은 자본과 국가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운동은 인문학이라는 신화를 노동의 인문학이라는 변화의 무기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힐링의 인문학에 저항하는 다양한 흐름들과 만나 시민교육과 성인교육의 주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2013. 『침묵의 공장』. 천년의상상.
- 강신주·지승호. 2013.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시대의창.
- 강양구 외. 2013. 『싸우는 인문학』. 반비.
- 고영직. 2010. “운동으로서의 실천인문학을 위하여”. 『문학/과학』 2010년 가을 호 통권 63호. 162-171.
- 고영직. 2010. “운동으로서의 실천인문학을 위하여”. 『문화과학』. 2010년 가을호: 162-171.
- 김기봉, “인문학과 문화융성”, ‘인문총’ 창립1주년 토론회, 2013. 11. 29.
- 김세곤. 2012. “인문학은 노동을 해방시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2년 4월호.
- 김준환. 2012. “국화처럼 향기롭게”. 『월간노동법률』. 2012년 4월호.
- 리오 휴버먼(Reo Huberman; 김영배 역). 2011. 『휴버먼의 자본론: 과연 자본주의의 종말은 오는가』. 어바웃어북.
- 막심 고리키(Maxim Gorki; 이강은 역). 2008. 『휴버먼의 자본론: 과연 자본주의의 종말은 오는가』. 푸른숲.
- 문화. 2011. “우리 시대 인문학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불온한 인문학』. 최진석 외 중. 휴머니스트. 21-54.
- 서동진. 2013.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CEO인가”. 『싸우는 인문학』 강양구 외 중. 반비. 17-26.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거리의 인문학』. 삼인.

- 손기태. 2011. “인문학은 위험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 후마니타스.
- 송기동. 2012. “한국의 인문학 정책과 사회적 기여”.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 신승환. 2010. 『지금, 여기의 인문학』. 후마니타스.
- 안상현. 2012. 『인문학 공부법』. 북포스.
-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이상훈 역). 200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거름.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김정하 역). 2012.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 얼 쇼리스(Earl Shorris; 고병헌 외). 2006.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 오창은. 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 월터 카우프만(Walther A. Kaufmann; 이은정 역). 2011. 『인문학의 미래』. 동녘.
- 유범상. 2014. 『필링의 인문학: 인문학 정치의 옷을 입다』. 논형출판사.
- 이성훈. 2012. “인문학과 그 위기, 그리고 문화연구”. 『오늘의 문예비평』. 2012년 봄호.
- 임승수. 2014.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http://blog.daum.net/bomessal/15422968>
- 장석주. 2012. 『일상의 인문학』. 민음사.
- 전봉주. 2011. “부산 인문학 르네상스-부산 소외층의 자활과 인문학의 실천”. 『부산발전포럼』 129호. 26-33.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서병훈 역). 2005. 『자유론』. 책세상.
- 최진석 외. 2011. 『불온한 인문학』. 후마니타스.
- 칼 마르크스(Karl Marx; 김수행 역). 2004. 『자본론 I (상)』. 비봉출판사.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Karl Marx·Friedrich Engels; 박재희 역). 2007.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 플라톤(Platon; 황문수 역). 1999. 『소크라테스의 변명』. 문예출판사.
- 하워드 진(Howard Zinn; 유강은 역). 2008. 『미국민중사』. 이후.
- 한국연구재단. 2013. 『인문학분야 지식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관점에서』.

<3강>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시민교육

김창엽⁷⁾

I. 시민과 시민교육

1. 시민 생성의 단계적 파동과 근원적 변화

가. 시민 생성의 단계적 파동

현재 수용되고 있는 시민에 대한 개념의 단초를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이다. 당시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시민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시민 개념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아테네의 시민사회는 신분사회로서 노예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의 시민 범주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반면에 아테네의 노예들은 시민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 아테네의 시민사회는 역사의 특정 기간에만 존재하여 현재와 이어지지 않는다. 아테네는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현재의 시민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역사적 시간과 현재의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시민개념의 맹아는 중세에서 비롯된다. 중세의 장원제도에서 각 장원의 물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부르주아(Bourgeois)⁸⁾가 담당하고 있었다. 재화유통을 맡은 부르주아는 자본축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 관점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적 시민으로 형성된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삶과 지위에 대한 관점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시민성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민 개념은 이 시민성에 터하여 그 뜻이 보태지고 만들어진다.

시민(市民)의 본디 뜻은 저자거리 사람들, 즉 장돌뱅이를 가리킨다. 현대적 시민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현대적 시민은 민주주의⁹⁾를 키워오고 완성하고자 하였고,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고자 하던 사람들의 의지와 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운동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게 되며,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가 발전시키는 존재를 가리킨다. 중세의 시민이 현대의 시민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시민형성 파동이 존재한다.

7) 한국시민교육협회 회장

8) 본디 말 뜻은 '성안에 사는 사람'임

9)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는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즉, 모든 사람이 모두를 위해 모두를 조율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시민형성의 1단계

시민이란 말의 본디 뜻은 저잣거리(시, 市)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民, 民)이다. 지금의 시민이라는 말의 뜻과 다르지만 중세에 맹아가 싹 트는 시민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럴 듯하다. 중세 장원을 지배하는 영주는 재화유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주아를 장원이 아닌 제3지대에 머물며 일을 하도록 하였다. 부르주아는 각 장원에서 필요한 재화를 수집, 생산, 유통시키고, 이후 해외무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는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시민 형성은 이러한 부르주아의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세 피지배계급인 부르주아가 자본을 축적하여 독자적인 세력과 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배계급과 다투어 민주주의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잉여 재화의 확보와 생산수단 소유, 그리고 구매력 보유의 수단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부르주아의 자본 축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르주아는 잉여 재화의 확보와 판매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다. A장원에 속해 있는 부르주아는 B장원에서 A장원이 요구하는 재화를 초과 구입한 후, A장원에 요구된 재화를 공급하고 잉여 재화는 별도 판매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이익이 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본 축적은 중세 장원경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부르주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한다. 농촌인 C장원에 속한 부르주아는 C장원에서 요구한 재화를 다른 장원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신이 마련한 생산수단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C장원에 유통시켜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 부르주아는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수단 소유는 이후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과 연결되어 자본가 계급 형성의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셋째, 부르주아는 생산원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한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통하여 생산을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입하게 된다. 원재료 구입은 부르주아에게 구매력을 갖추게 한다. 이 구매력은 원재료 비용을 낮출 때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잉여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구매력을 활용하여 원료를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해외에서 원료공급 시장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은 식민지 확보와 연결되는 제국주의로 전환된다.

이러한 잉여 재화의 확보와 판매,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물 판매, 생산원료 구입과 구매력 확보는 부르주아가 재화유통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이 재화를 유통시키는 일련의 기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르주아가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방식의 자본 축적은 해외무역 등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부르주아는 더욱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이런 경로를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보유하게 된다. 이 힘은 부르주아의 세력 결집의 토대가 되며, 향후 시민혁명을 통해 왕족과 귀족 등의 중세 지배계급과 다투어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¹⁰⁾을 배제하고, 시민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10) 유럽의 중세 구체제를 가리킴

시민형성의 1단계는 부르주아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자본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다. 중세 장원제도 아래에서 민중은 농업을 위주로 일을 하는 노예 내지 농노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안에 들어가 지배계급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 민중과 다를 뿐, 이들 역시 지배계급에 의한 정신적, 신분적 제압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부르주아들이 장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주거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일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정신적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경험을 확보하여 지배계급의 정신적 압제를 벗어날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끝으로, 자본축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기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적 해방, 지식과 경험 확보, 자본 축적 등이 시작되어 시민 생성의 태줄이 형성되는 것을 시민형성의 1단계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민형성의 2단계

중세 장원체제에서 장원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면서 재화 유통을 맡은 부르주아는 필연적으로 실용적 지식을 획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는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조사, 관련 법적 사항, 거래 방식 등의 실용적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화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일과 사건, 환경 등은 부르주아에게 사회를 꿰뚫어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성찰적 경험을 축적하게 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이후 실용학문과 대학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장원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한 후 재화 유통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중세 장원 체제에서 노예 또는 농노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다. 이들은 민법, 계약법, 물류 유통 등 실질적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도시로 몰려들게 된다. 이들에 의해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해당 지식과 경험은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춰 나가게 된다.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용지식 교육의 틀은 이후 대학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고, 많은 실용지식의 경우 대학에서 정규학과로 개설되어 학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시민형성의 2단계는 부르주아 역량의 수직적 인식 확장과 수평적 역량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중세 이래로 부르주아는 지속적으로 수평적 역량 확장과 수직적 인식 확장을 가져온다. 수직적 인식 확장은 관점과 인식의 전환 즉, 인간의 존엄과 권리,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아성숙이 내면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수평적 인식 확장은 자본의 축적, 지식의 발달, 경험의 확장 등을 의미한다.

3) 시민형성의 3단계

장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원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양태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폐쇄적인 장원에서 한번 고착된 사고방식이나 사회 체제, 그리고 관점과 인식, 태도가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체제, 관점과 인식 그리고 태도는 장원 체제에 강력한 응집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체제를 고착 시키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폐쇄적인 장원과 달리 도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시에 거주하는 부르주아는 재화유통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나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이러한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장원에서 고착되고 형성된 삶과 사람, 사회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인식을 너르고 깊게 하게 된다.

한편, 부르주아는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점차 영주 등 지배계급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화유통과 세금 납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주아는 지배계급의 무지와 무식, 탐욕,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게 되고, 지배계급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게 된다. 이전에는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의 존재 자체에 위축되고 굴종하였으나, 자본과 지식, 경험의 축적, 관점과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위축과 굴종을 극복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지배계급과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다른 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관점을 갖추게 된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존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부르주아의 자본 축적, 경험과 지식 축적, 사고와 인식 전환이 융합되어 중세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부르주아의 변화되고 확장된 관점과 인식은 기존의 지배체제와 사회구조의 부적절함과 모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권리의식으로 확장되어 중세의 왕권신수설이 천부인권설로 전환하게 되는 토대를 이루게 된다. 시민 형성은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시민형성의 3단계는 시민혁명을 전후로 발생한다. 중세 지배계급과 부르주아 사이의 갈등과 충돌 국면은 시민혁명을 통하여 폭발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이미 자본 축적, 지식과 경험의 확장, 인권과 평등,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일정부분 이루고 있었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이 소유한 공장에 고용되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흥작으로 인한 기근과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와 농민을 규합하여 구체제의 지배계급을 공격하여 축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형성의 세 번째 파동이 강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세 번째 파동의 자장은 시민의 범주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 자유, 평등 등의 가치 수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르주아만이 시민으로 가름될 수 있었고, 시민의 범주 조건에서 배제된 노동자와 농민은 이후 시민 범주의 용량을 확대시켰고, 스스로 그 안에 포섭되기 위하여 자본가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이 시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변증법적으로 형성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나. 근본적 변화와 시민성

1) 근본적 변화와 시민성

중세 부르주아를 주축으로 구성된 시민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재화를 유통하여 자본 축적, 지식과 경험 축적,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세 단계의 시민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민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구축된 것은 인권, 자유, 평등, 참여, 저항 등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와 지향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은 중세 체제와 가치를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불어 두루 누리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 즉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게 된다. 현재의 시민성 개념과 맥을 잇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시민이 더불어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품성에는 인권의식,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 참여, 관용, 타협, 다수결 원칙, 소수의견 존중, 비판과 저항, 책임, 측은지심 등 도덕적 규범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현재 회자되는 시민성에 포함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품성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되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둘째,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길가의 돌맹이 하나도 말로써 움

직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더불어 사는 것은 말로써만, 주장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삶과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이 가운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¹¹⁾. 이를 위한 방법과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더불어 살기를 통해 상호인간화를 격려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구조를 간파하고, 인간화를 위한 지금, 여기의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을 극복하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물론 현재의 사회에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요인들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 제도적, 사회 구조적 요인이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배제시키는 실천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되어지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성이란 결국 더불어 사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것의 토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시민성이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서의 품성,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요인을 간파하고 이를 극복하는 실천, 더불어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이를 현실화 하는 방법 모색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시민과 시민교육

가. 교육의 본디 뜻을 통한 시민교육의 의미 되짚기

시민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고, 혼란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의 경우 시민에 대한 교육인지, 시민의 교육인지, 시민을 위한 교육인지 애매하게 된다.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도 있다.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피는 것은 거꾸로, 교육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갖춤과 존재를 위한 만듦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쳐 보태지고, 다듬어지며, 채워져서 생존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계의 조산아라고 할 만큼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덜 갖춰진 상태로 태어난다. 특히 생존행위에 필요한 특정한 행동인자들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존을 위한 갖춤과 함께 존재 자체의 완성을 위한 만듦이 있어야 한다. 이때 어떤 교육 경험을 가지는가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행동유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자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성질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성질을 따라야 한다. 교육은 인간이 이러한 성질을 더듬고 찾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림 1]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범주가 있고, 현재 인간의 현상이 있다. 스스로 그러함과 현상을

11)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거대담론이거나 형이상학적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최소한의 예의로 남성들이 소변을 앉아서 보기, 가족 간의 소통과 존중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되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등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더불어 살기의 구체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

연결시키고, 현상의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교육의 개념

이와 같이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교육은 인간이 인간의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더듬고 찾아 따르도록 하여,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공부하는 과정이다. 공부는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애를 써서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즉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 비시간적 깨달음이나 계시적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존재한다(김창엽, 2016).

첫째, 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갖춰나가면서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되어가는 영역에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 자유, 정의, 평화, 평등, 인권의식, 박애, 참여, 관용, 타협, 저항, 다수결 원칙, 소수의견 존중, 비판의 허용, 책임 등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으로 수용될 수 있다. 스스로 그러함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관계 맺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맺기, 다른 세계와의 관계 맺기¹²⁾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되어가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되어가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며, 익히고, 실천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전문기술, 사회화, 문화화, 의사소통, 인간관계, 생존수단 확보, 인간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다. 인간은 이러한 것을 익히고 실천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살아가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되어간다는 것이다. 즉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것으로 구실을 하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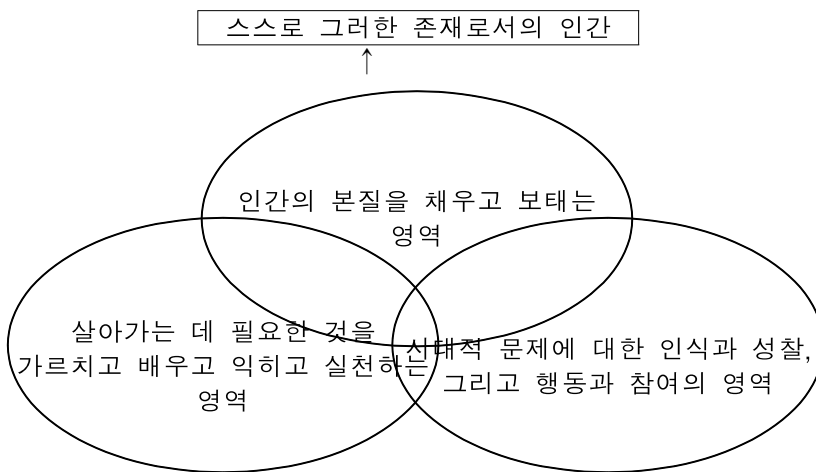
셋째, 교육은 지금, 여기의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거듭 새롭게 성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이 인간이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에 비해, 지금, 여기의 사회와 시대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비인간화의 배경은 사회구조나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상적 삶에서 사색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 이 사회구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구조나 제도는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배태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지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 요인을 간파하고, 비인간화요인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비인간화의 늪에 빠진 인간을 인간화시키는 현 시대의 소명을 파악하고, 응해야 한다. 이는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정의 구현에 관련된 영역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활동은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사회구조나 제도를 배척하고,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 되어가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교육으로 파악해야 한다. 교육은

12) 자신과의 관계 맺기는 성교육,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정치교육, 다른 세계와의 관계 맺기는 생태교육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다.

언제나 지금, 여기의 시대적 요청에 귀를 기울여 이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거듭 새롭게 성찰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은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채우고 보태는 영역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영역,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시대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며 해결하는 영역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은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되어가도록 움직이게 한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 되어가도록 하는 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포섭한다. 이러한 교육의 영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중첩되고 연결되게 된다. 교육의 영역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육의 영역

자료출처 : 지역사회와 시민교육(김창엽, 2016)

교육은 평생이라는 시간과 삶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평생동안 축적되는 인간의 인간화를 위한 끝없는 관계맺기와 경험 쌓기의 과정, 즉 공부의 통합이다. 교육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다. 평생과 삶에서 인간의 비인간화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인간화와 타인의 인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교육과 평생교육, 시민교육의 관계와 중첩지대의 존재를 볼 수 있다.

나. 시민과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나 지방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또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어떤 대상을 상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방어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사회 구성원에게 부정적 위협을 끼칠 행동을 담당하게, 공공연하게 할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관점과 기대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우선, 학계에서는 시민교육이 시민들에게 비판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음,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사회질서 유지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의 동조자 확보, 그리고 정당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자원동원 등의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각 주체의 시민교육 개념 자체가 실천적 목적지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과 지향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시민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 그리고 비전이 담긴 실천행위로서 내부 참여자들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시민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교육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객관성이나 이론적 정합성 보다는 그 실천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가 더 많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교육의 구체적 맥락 안에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는 가치성과 지향성이 시민교육의 개념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가치성과 지향성은 시민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속에서 구성되어 나오는 상황 이해의 구조를 반영하며 개념 자체가 실천적 목적지향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민교육이라는 개념과 정당성은 그 실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 그리고 전망이 담긴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고, 교육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며, 시민교육이 어떤 노릇을 해야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교육이 특정한 세력의 의도 또는 주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시민교육이 스스로 비롯되어 스스로 그러하도록, 즉 자유(自由)롭고 자연(自然)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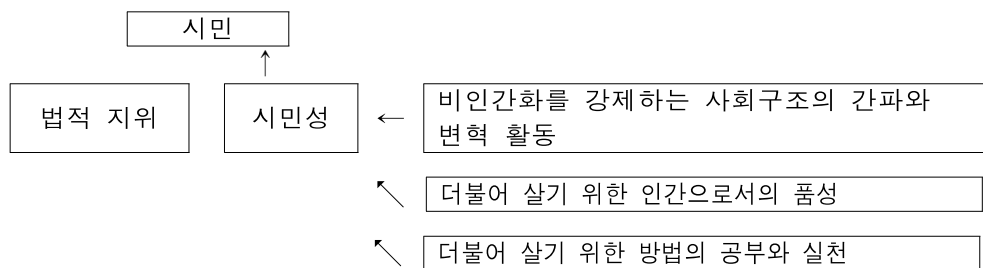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보면 시민개념은 그리스.로마 시민을 가리키는 고대시민에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시민, 그리고 현대시민으로 변천한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을 바탕으로 한 고대시민 개념과 범주, 그리고 자본 소유의 유무에 터한 근대시민의 개념과 범주는 인간 존엄성을 인간 전체에 확대하려는 오늘날의 시민 관점에서 보면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이란 언제나 권리와 의무, 존재 가치를 지닌 국가시민을 뜻하므로 원시공동체의 성원이나 중세의 신민¹³⁾ 및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 사회의 성원을 시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김창엽, 2017). 그런 점에서 시민개념은 오늘의 현대적 시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현대적 시민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키워오고 완성하고자 하였고, 인간으로 더불어 살고자 하던 사람들의 의지와 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변증법적으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자격과 속성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13) 백성이라는 용어가 근세 이후 발전되어 나타난 개념이 신민(the subject)이다. 신민이라는 개념은 관료적 통제가 강화된 시점에서 ‘국왕-신민’이라는 주종적, 종속적 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부국강병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첫째, 시민의 자격은 법적 지위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의 개념을 법률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으로서 시민은 정치적, 법적 소속성에 관계되어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법적 소속성은 국가와 지역사회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즉, 시민은 국가에 대해 병역의 의무 등 특정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적 소속성이 있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 의무를 가지면서, 동시에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적 권리 및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

둘째, 시민은 시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성은 인간으로서의 품성, 인간화를 위한 사회구조와 작동원리의 간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더불어 살기 위한 공부와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시민은 의무, 권리, 참정권 등에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법적 지위는 시민의 외연에 해당되고, 시민성은 시민의 내적 가치를 의미한다. 외연은 갖추었지만 내적 가치가 미흡한 경우 시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경우 시민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민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민의 개념

자료출처 : 지역사회와 시민교육(김창엽,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개념은 시민성에 중점을 두고 자리해야 한다. 이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역사적 흐름의 결과물이고, 역동적이고 변증법적 가치 축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성은 독특한 인간의 속성으로 진술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시민성이 당시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진 특징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에 의하여 발전되고 형성될 수 있는 당위로서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김창엽, 2005). 비인간화 요인을 간파하고 극복, 실천하는 이러한 시민성의 속성은 시민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II.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1.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사회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농촌사회, 도시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은 시민사회에 소속된다. 시민사회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시민사회에 소속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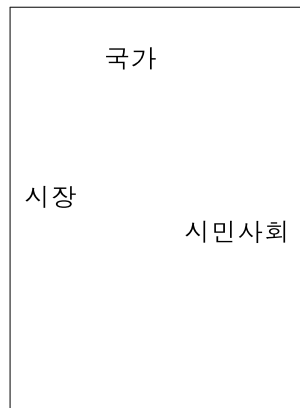
로운 부면을 짚어보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가.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맹아는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 장원에 재화를 유통시키던 중세 장원에 소속된 부르주아는 장원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장원 밖 지역에 거주하면서 재화를 유통시켰다. 이 지역에 재화유통을 담당하는 부르주아와, 이들에게서 실용지식을 익혀서 장원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지역들이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여 도시가 되었다. 부르주아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재화유통과 생산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후 부르주아는 시민혁명을 통해 구체제인 앙시앵 레짐을 배제시키고 자본가 계급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를 사회의 중심 위치에 세웠다.

이 과정에서 소위 왕권신수설이 배척되고 천부인권론이 수용되었으며,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었고,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주장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기존 체제와 사상이 거부되었다. 기존 체제인 앙시앵레짐이 배척되며 왕과 귀족 중심의 지배 체제가 거부되었다. 아울러 계급과 신분에 대한 사상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었다. 다음, 더불어 살기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인권과 평등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모색되었다. 끝으로, 새로운 사상이 구체화되었다. 인권과 평등, 자유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근대사회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이익 추구와 더불어 살기라는 2가지 가치가 포섭된 사회가 형성되었다. 사회는 국가보다 큰 개념이다. 이 사회는 개인이익 추구와 더불어 살기라는 가치 아래 [4]와 같이 시장, 시민사회, 국가라는 3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사회에 대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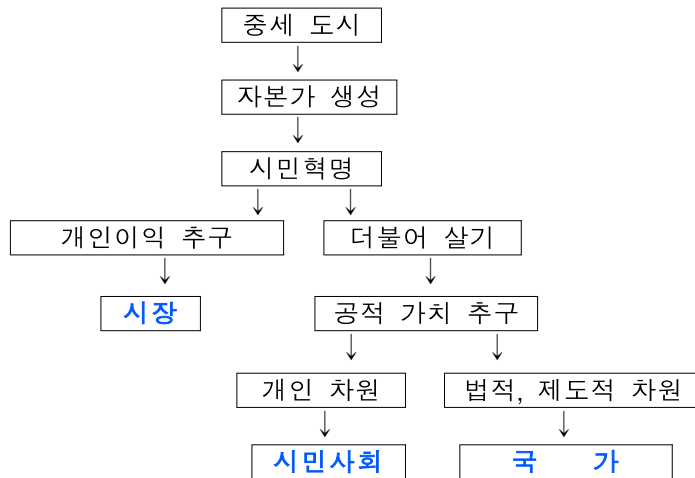
개인이익 추구는 시장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시장은 주로 자본가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가들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편, 더불어 살기는 공적 가치의 추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공적 가치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 공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개인 차원, 그리고 법과 제도 차원의 2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의 공적 가치는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실현된다. 시민사회는 구체적 시민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시민사회는 개인차원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에 속해있는 시민 개개인의 시민성을 필요로 한다.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정치, 경제적 삶이 보장되는 다원적이고 개방된 틀이 시민사회의 선행조건으로 존재하게 된다.

둘째, 법과 제도 차원의 공적 가치 추구는 국가의 형성으로 구현된다. 국가는 법과 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통해 공적 가치를 추구한다. 서구에서 국가는 최소한 19세기 이후, 특히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개개인들이 모인 집단과 조직들은 시민사회를 발전시켰고,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국가라는 지배 또는 통제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이때부터 국가는 사회구성원들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과 갈등을 중재하고, 국가와 사회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두 개의 축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개인이익의 추구하고 연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국가는 공적 가치의 추구하고 연계되어 구성된다. 시민사회의 성립을 시장과 국가의 성립을 정리하면 [5]와 같다.



[그림 5] 시민사회의 성립 과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신분적 구속에 놓이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이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가리킨다. 시민사회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형성되었고, 자유경제체제를 경제적 토대로 하며, 자유·평등·박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내세운다.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서구 시민사회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서구 시민사회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시민사회가 중세 이후 시민혁명 등에 의해 성립, 발전해 왔다면, 한국 시민사회는 봉건시대 및 일본 제국주의, 군부독재와의 투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 서구시민사회가 100-200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비해 한국 시민사회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왔다. 한국 시민사회의 기원을 구한말부터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라는 말이 활발해 진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둘째, 서구시민사회가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비해 해방 후 한국 시민사회는 독재정권에 의한 경제성장 우선논리가 지배한 사회이었다. 즉, 군부독재정권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 속에 관용과 타협, 다수결 원리, 소수의견 존중, 권리와 의무 등의 시민사회의 속성이 정착할 틈이 없었다.

셋째, 서구 시민사회는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를 촉발시킨 반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부르주아가 시민사회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서구의 시민사회는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와 서구 시민사회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시민사회와 서구 시민사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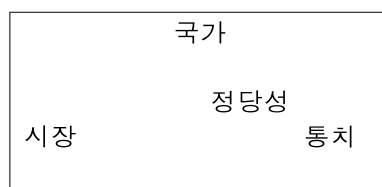
구분	서구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성장	- 중세 이후 시민혁명 등에 의해 성립, 발전	- 봉건시대 및 일본 제국주의, 군부독재와의 투쟁을 통해 성장
성격	-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진 - 점진적 발전	- 해방 후 독재정권에 의한 경제성장 우선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 관용과 타협, 다수결 원리, 소수의견 존중, 권리와 의무 등의 시민사회 속성이 정착할 틈이 없었음
발전	- 100-200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	-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
중심	- 부르주아 중심으로 시민 사회 촉발	- 부르주아가 시민사회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음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와 동일하게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이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서 형성되기 보다는 정당성 없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통해 결사와 운동의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한국사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시민사회 내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나 법, 제도 영역도 활성화되어 구성적 시민사회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외부의 국가나 시장을 민주화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 영역의 민주화도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나. 시민사회의 다층적 성격과 시민교육

국가와 시장 이외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잔여영역이 아니다. 사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체들의 총체이자 헤게모니적 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투쟁이 발생하는 공간 또는 지형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및 시장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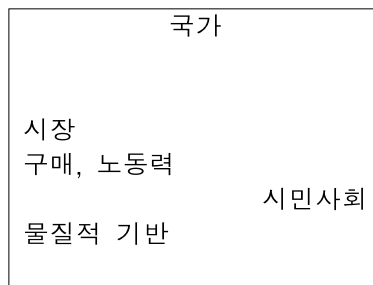
첫째, 시민사회와 국가는 정당성 제공과 통치를 상호 제공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적 자기결정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여론 형성과 다양한 결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다원적 갈등과 연대가 이루는 공간이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6]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둘째, 시민사회와 시장은 노동력과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상호 물질적 기반의 구실을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으로부터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물질적 기반을 제공받으며, 시장은 생산물을 제공하고 구매행위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의 분화에 따라 다양한 계급적 지위가 이루어진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시장의 경제구조나 경제활동의 특정한 성격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국가 및 시장과의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는 내적으로 다양한 적대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적대를 구성하는 각 세력들 간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과 투쟁, 타협과 연대를 통해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성격과 이들 간의 관계가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다양한 적대들의 존재는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며 민주주의 의식과 계급의식 등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예로 들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성격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적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한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을 수행해 온 민중운동의 맥을 이어받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념주창형 운동 보다는 실사구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참여적인 운동을 펼치려는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이다. 민중운동이 사회 전반과 본질에 대한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면 진보적 시민사회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법을 사업의 수단으로 삼으며, 필요시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둘째, 보수적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범주에 소속된다. 사회변화의 중심축을 사회 중산층으로 상정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영역이다. 1990년대 초반 ‘민중운동의 시대는 가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왔다’는 주장을 하여 민중운동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보수적 시민사회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장한다. 보수적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가 또는 수구·기득권적 시민사회가 수용할 경우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거나 심각한 내부혼란을 겪기도 한다.

셋째,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사회운동의 존재 여부는 보는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서구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제도화, 합리성의 보수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출현하였다. 서구의 상황과 한국의 현실 상황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은 변혁적 성질을 획득해나가는 성장과정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각종 비계급적 사회운동들은 서구에서처럼 노동운동을 대신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동시에 노동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운동이다. 서구사회에서 반제도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출현한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신사회운동적 시민운동의 차이는 우선, 신사회운동적 시민운동이 기존 민주화운동과 같이 활동을 하였고, 다음, 서구와 달리 이들 운동이 주장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등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의 맥락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시민사회를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구·기득권적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지형에 자리하고 있다. 수구·기득권적 시민사회는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우선, 1987년 이전에는 국가의 우산 아래 존재하였으며, 외견상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자체의 결집과 응집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자신들을 보호하던 국가의 힘이 일정부분 약화되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을 보이게 된다. 과거 농협이나 한국노총은 권위주의 국가의 하부행정기구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배타적인 대표성과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던 권위주의 국가의 해체와 함께, 이들도 독자적인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관련단체들의 경우 반공연맹이 1987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재창립하는 것처럼 자율화를 위한 시도들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직접적인 주장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언론, 재벌, 관료 등과 실질적 동맹을 맺으며 강력한 세력을 가진 시민사회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존재를 드러내며 국가와 다채로운 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주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라는 주장은 하나의 허구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주대치선은 국가 대 단일한 실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대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대 시민사회 내의 민주운동 부문 같은 특정한 저항적 집단의 대립 속에, 또는 시민사회 내의 특정 집단과의 대립 속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근대적인 정치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다양한 계급계층이 다투는 공간이며, 국가에 의해 동원화 되는 국가종속적 시민사회 대 국가에 저항하는 민중적 부문이 각축하는 공간¹⁴⁾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지배세력이 지배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간이자, 민중세력이 대항헤게모니를 확립하고자 하는 다툼의 일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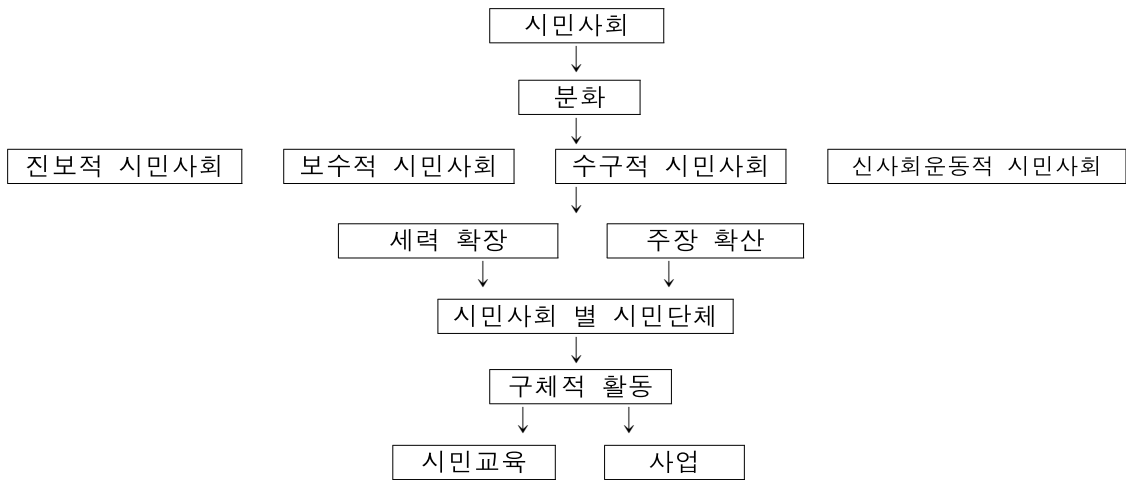
시민사회는 삶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엇갈리고 중첩된 복합적 현상이다. 이 현상은 지역사회와 다층적으로 연결된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토대이자 교육의 터전이다. 시민사회가 어떤 지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간화 또는 비인간화가 진행되게 된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와 유기적 통합을 이루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되어가게 하는 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지배력과 통제력을

14) 시민사회의 일부로서의 대자본 또는 재벌이나, 시민사회의 국가종속적인 조직으로서의 관련단체들이 개발독재적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한 사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또 다른 세력인 일부 단체들이 국가의 정책과 주장에 지지 행동을 하며,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와 동맹한 사실 등은 저항적 운동정치의 실천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확보하고 시민사회를 인간화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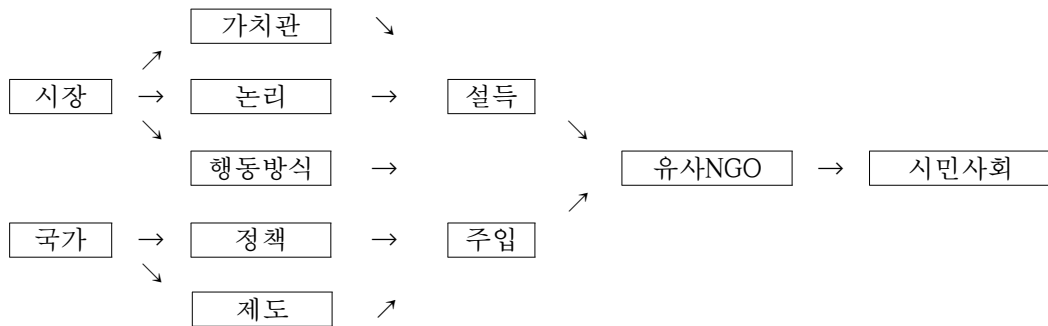
다. NGO와 시민교육

시민사회는 동일한 성격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일 영역이 아니다. 진보적 시민사회, 보수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분화된 시민사회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추상적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 시민사회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구체화시키며, 세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실체가 요구된다. 이러한 실체로 대표적인 것이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즉 너른 의미에서의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교육과 사업 등의 구체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세력을 확대한다. 분화된 시민사회와 해당 시민사회에 소속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리하면 [8]과 같다.



[그림 8] 분화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관계

한편, 시장이나 국가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단위 시민사회와 결합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운영하는 유사시민단체가 있다. 시장과 국가가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장은 자신들의 논리와 가치관, 행동방식을 시민사회에 주입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한다. 이는 시장의 이익과 유리한 환경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국가 역시 자신들의 정책 수립과 집행, 제도 등의 홍보와 추진에 유리한 환경과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장과 국가는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주장과 관점을 주입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시장과 국가는 기존의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새로운 시민단체의 결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시장과 국가에 소속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 소속된 시민단체와 다른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와 시장에 결합된 시민단체는 유사시민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과 국가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9] 시장과 국가, 유사시민단체의 교류와 역할

이와 같이 분화된 시민사회에 속해있는 시민단체는 다양한 성격과 속성, 기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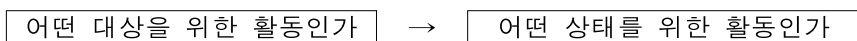
, NGO는 공적 이익 추구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하고, 시민단체의 속성과 지향이 다채롭기 때문에 공적 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시민사회가 다양한 세력들로 나누어져 있고, 구성원이 다층적으로 구분되므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 그리고 일반이익과 특수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의 지향을 공적 이익이라는 맥락에서 짚어볼 때 단순히 활동 내용과 대상을 넘어서 궁극적 지향이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NGO의 지향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NGO의 지향을 이타성과 이기성으로 짚어볼 수 있다. NGO의 지향을 모두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경우 과연 이것들을 NGO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NGO의 일반적 지향과 달리 모두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조직의 활동이 조직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조직 밖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즉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나'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해당 조직을 NGO에 포함시키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선적으로 특정 조직의 구성원 이익에 집중된 활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집단에게 그 활동의 내용과 성과가 열려있으면, 그 활동지향은 사적 이익이나 특수 이익이 아닌 이타적 활동으로 공적이익이라고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NGO의 지향을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또는 일반 이익과 특수 이익으로 살펴볼 수 있다. NGO가 공적이익 또는 일반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적 이익 또는 일반 이익은 개념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우선, 지자체의 정책집행 및 예산사용에 대한 감시, 환경문제, 교육, 의료, 주택,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나 배려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다음,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공적이익을 규정할 경우 재벌개혁, 복지, 여성, 노동, 소수자, 인권, 생태 등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NGO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특정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압축된 집단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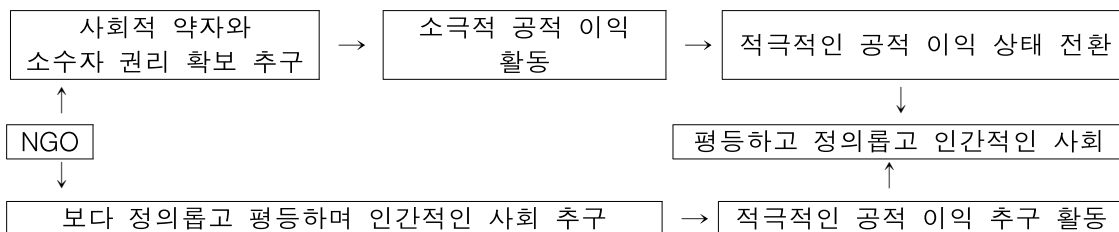
지금, 여기 많은 NGO들이 재벌개혁, 복지, 여성, 노동, 소수자, 인권, 생태 등의 쟁점들과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NGO들을 특정 집단과 관련된 사적이익 또는 특수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런 쟁점과 활동들이 전체 사회라는 맥락과 영역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또는 일반이익과 특수이익의 모호함을 벗어나기 위해 공적이익 또는 일반 이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또는 일반 이익과 특수 이익을 활동 대상 중심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활동 목표나 지향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위한 활동인가 보다는 어떤 상태를 위한 활동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즉, 대상에서 활동으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적 이익은 사적 이익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 이익 자체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적 이익을 소극적 공적 이익과 적극적 공적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공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를 구하는 것이고, 적극적 공적 이익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이익에 대한 관점 전환을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공적이익 개념 규정을 위한 관점 전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적 이익은 일반 이익인가, 특수 이익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이익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상태인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인가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는 모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지향한다. [그림 11]과 같이 소극적 공적 이익의 단계를 거쳐서 적극적 공적 이익으로 전환하는지, 아니면 바로 적극적 공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는 모두 NGO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NGO활동의 형태와 지향 상태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일반 이익과 특수 이익에 대한 현실적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들을 공적 이익 또는 일반 이익으로 보느냐, 사적 이익 또는 특수 이익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 다양한 속성과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무엇일, 왜 공적이익으로 보느냐에 대한 현실적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적 이익에 대한 이론적 개념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규정을 둘러싼 시민단체 간의 헤게모니 투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NGO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이타적인 시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문제와 갈등 해결을 통해 인간의 비인간화가 인간화의 과정으로 재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교육으로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민단체는 추상적 시민사회의 지향과 목적을 구체화, 실체화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화의 길을 구

시민교육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Ⅲ.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시민교육

1. 사회정의와 시민교육의 연리지

사회정의(社會正義, social justice)는 일반적으로 사회자원과 기회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고, 바람직한 사회의 구축하는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정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된다. 사회정의는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모두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의로운 현상에 대한 것을 총망라하여 나타낸 의미이다.

한편, 어원으로 살펴볼 때 정의는 ‘바르고 옳다’라는 뜻 외에 다양하게 새겨질 수 있다. 정(正)은 ‘바르다, 바로잡다, 갖추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義)는 ‘옳다, 바르다,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정의를 ‘놀리고 굽은 것을 바로잡다, 높고 낮은 것을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의는 “놀리고, 굽고, 낮게 처한 것을 바르고 옳게 제대로 잡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의는 대상 중심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목표나 지향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위한 정의인가 보다는 어떤 상태를 위한 정의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대상에서 상태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의를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를 구하는 것이고, 적극적 정의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는 불평등하고 그릇된 사회 상태인가, 평등하고 옳은 사회 상태인가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의 시민교육은 사회정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별개의 독립되고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다양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는 교육의 특성 속에서 짚어져야 한다. 교육은 평생이라는 시간과 삶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교육이 인간화를 지향하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와 제도 등을 간파하며, 이를 배제시켜 인간화가 이루어지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삶이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상태가 되는 터로서, 과정의 축적으로서 존재한다. 시민교육이 인간화를 지향한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인간화를 위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상호 의미이며 가치로서 자리하게 된다.

2. 지역사회운동과 시민교육

가. 지역사회의 시민교육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공간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의 공간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은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인 보수적 시민사회, 진보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신사회적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지역의 각 영역이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과 연계되고, 시민사회의 분화된 각 영역이 지역의 각 영역과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와 분화된 시민사회는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연계구조를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와 분화된 시민사회의 중층적 상호 연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는 공간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우선, 지역사회 안에 공간적 성격, 사회적 성격, 문화적 성격, 정치적 성격, 직업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 공간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 단위가 종합되어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각 영역에 독특한 구성원이 존재하여 사회적 성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화된 시민사회는 각각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 보수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중첩된다. 예를 들어 진보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보수적 시민사회,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 각각은 지역사회에 포섭되어 있다. 각각의 분화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동시에 포섭되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의 공간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은 분화된 시민사회와 관계를 갖는다. 각각의 지역사회 영역은 진보적 시민사회, 보수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신사회운동적 시민사회에 포섭되어 있다. 지역사회 영역 각각은 분화된 시민사회에 동시에 포섭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는 단일 개념이나 영역, 성격으로 정의할 수 없는 중첩적이고 다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지역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성격의 복잡성과 구성원의 중층성을 감안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경제적인 부분, 즉 물질적인 범주로 제한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과 활동 등이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성가나 보상을 겨냥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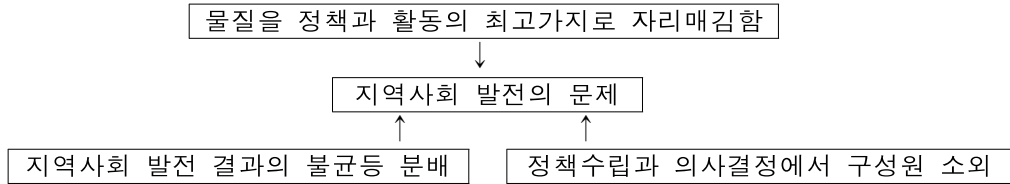
첫째, 물질적 결과물의 생산이 모든 정책이나 활동의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물질은 결국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정책이나 생산의 궁극적 지향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물질 생산을 지역사회 발전의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 하면 인간의 비인간화가 가속되고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 행위의 결과에서 물질적 가치가 생산되어도, 이것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크게 만들어진 파이 역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면 된다. 지금까지 지역의

생산물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 결정은 한 적이 없고, 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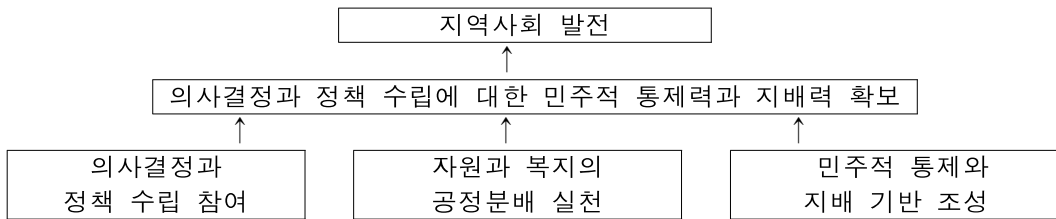
셋째, 정책의 가치와 우선순위, 물질적 생산물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소외된다.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고, 이것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에 속한다. 의사결정에서 구성원이 배제되는 것은, 구성원의 인권과 시민권이 무시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판단과 결정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의 문제를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지역사회 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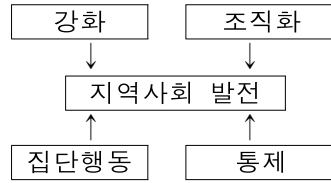
지역사회 구성원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판단하여 선택하고, 미래의 삶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삶을 움직일 당위적 책무와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발전은 이러한 구성원의 책무와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발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자원과 복지의 공정한 분배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발전은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정책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

나. 지역사회 발전의 필요요인

지역사회 발전은 지역의 자원과 복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 등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림 14]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 조직화, 집단행동, 통제 등의 요인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 구성원들의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이해집단과 세력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과 대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인

지역사회 발전은 궁극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 기반을 두게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에 기반을 두는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구성원의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강화를 민주주의 개념 수용에 대한 강화,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의 분권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수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조율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또는 생활세계에서의 민주주의도 동일한 맥락을 유지한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분권화되어 지역사회에 권한이 주어진 민주주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모두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수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경로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가지치향적이고, 효과적이며, 모든 사람이 두루 누리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긍정적인 내용의 의사결정 또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의미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언제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을 배제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방향과 내용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강화가 확보된 지역사회는, 압축된 소수¹⁵⁾가 지역사회 내 많은 다른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중앙집권화된 권위 체제의 지역사회와 대척점에 있다.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의 민주주의 개념 수용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압축된 소수가 의사결정, 자원 및 복지의 집행을 독점하는 것을 배제하고, 독점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의 독점 배제와 독점체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15) 소수는 지역사회 내 이익독과점집단을 가리킨다. 지자체 관계부서 등과 연계되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 내지 정책수립을 추진하는 소수집단을 의미한다.

함께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원 및 복지의 분배를 통제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위해 자신들이 무력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고 있고, 지자체 체제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학습해야만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는 이론과 지식의 전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같은 시민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속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기반이 된다. 강화의 중심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위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사결정과 정책, 자원과 복지의 분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에 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자신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강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에서 구성원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많은 경우,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는 제한된 범주에서만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자체 대표와 의회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여 지자체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임한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나 이해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보다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더라도, 거대 기업이나 이해집단 등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자원, 정책적 지원을 움직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주목할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거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강화될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자체와 거대 기업, 그리고 이해집단 등이 지역사회 내 자원과 복지의 분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모든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복지의 공정한 분배에 참여하며, 지역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민주적 지배력과 통제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부분이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조직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은 항의와 저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항의와 저항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항의와 비조직화된 저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이고 단면적이며, 임시방편적이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즉각적 쟁점 처리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집단적 차원에서의 행동은 집단적 항의와 조직화된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다면적이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주목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 확보와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행동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행동과 집단적 차원의 행동 비교

구분	개인적 차원의 행동	집단적 차원의 행동
행동유형	- 개인적 항의 - 비조직화된 저항	- 집단적 항의 - 조직화된 저항
행동특성	- 일시적 - 단면적	- 지속적 - 효과적 - 다면적
행동결과	- 임시방편 - 즉자화된 쟁점 처리	- 문제의 근원 해결에 주목 - 지역사회 구성원의 통제력, 지배력과 연계

집단적 차원의 행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다. 조직화의 가시적 결과물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이다. 조직은 다음과 같이 개인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실행하는 사업 영역이 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사업 영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과 함께 할 회원을 포섭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끝으로, 조직의 지속 기반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둔 활동 체제라는 것은 시민조직이 사업추진체제와 자원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킨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첫째,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서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통합하고 대표하며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안의 특별한 문제와 연관된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은 모두 잠재적 유권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관계가 있는 지역의 정치인 또는 선출직 공무원은 잠재적 유권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결집되어 있는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힘과 영향력을 인정하게 되고,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요구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자금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이 회원으로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을 통하여 집단화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다투는 것은 어렵지만, 개인이 모인 집단은 다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지속성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자원과 복지 분배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문해교육 실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소외와 차별 해소 등의 활동이 상당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는 활동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이러

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획득한다. 우선,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구성원이 전문가 노릇을 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와 오류를 통해 학습하고, 역량을 확보하고, 지식과 경험을 농축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시민조직 내의 구성원은 지난 활동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이를 현재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로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가름될 수 있다. 이 전문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시민조직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조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시민조직 내의 전문적 직무로 규정된다. 다음, 지역사회 시민조직에서 해당 활동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다. 이 채용은 시민조직 구성원 가운데 해당 활동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조직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을 사용하여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이 전문가는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목적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어도, 활동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구성원은 일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계 부서나 의회의 회의를 관찰하고, 세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학습하고, 협력자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신속하게 반응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한다. 즉,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지역사회 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상황에 대한 초기 인식과, 신속하게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문제의 동향을 주시하고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특별한 문제 영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 영역에 관련된 지자체의 관계 부서나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문제를 변화시키고 반응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문제가 부각된 동안 지역사회 구성원과 접촉하여 힘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화 걸기, 매일 보내기, SNS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지역사회 구성원을 조직의 범주 안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강화시키는 배경에는 통제력과 지배력 확보, 지속성 유지, 전문가 확보, 신속한 반응이라는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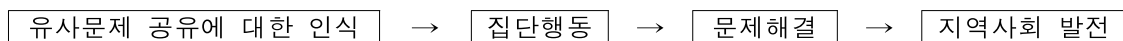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특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긍정적인 활동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정책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지자체 관련 부서나 언론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지도부가, 관련된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배반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

와 쟁점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면 조직화 노력은 낭비된 것이고, 조직은 유지 외에 의미가 없게 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 지도부의 개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발판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운영과 통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지역사회 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

지역사회 발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은 [그림 15]와 같이 지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림 15] 지역사회 발전의 과정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은 지역사회 시민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행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집단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집합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끝으로, 이러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들을 지자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성, 또는 계층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이 소박한 개인주의와 이미지 조작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박한 개인주의가 집단행동을 어렵게 한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의 장단점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성공하거나 실패한다고 믿는 소박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닦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이들은 집단적 행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주목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박한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면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이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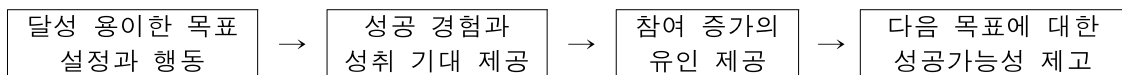
둘째, 지자체의 관련 부서나 기업의 이미지 조작이 집단행동을 제한한다. 지자체의 관련 부서나 기업 등에서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를 가리거나 호도하기 위해 이미지를 조작한다. 이들이 시도하는 이미지 조작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이 어렵게 된다. 이미지 조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우선, 지역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이미지가 조작된다. 주로, 대중매체, 학교, 경찰, 공무원, 기업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입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시도한다. 다음, 상징조작을 통해 이미지가 조작된다. 주로,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해 상징조작이 이루어

진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소박한 개인주의를 우선 시 하고, 여기서 찾는 행복이 최고이고 이상적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미지 조작이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파편화 시키고, 개인 세계에만 매몰되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게 강제한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에 대하여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의 문제와 쟁점을 이해시키고, 다음, 지역사회 구성원이 파편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지역사회 내 문제와 쟁점에 대한 참여가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의 강점과 장점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교육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행동을 이끌어 낼 때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행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이들이 성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달성하기가 용이한 목표를 설정해서, 참여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성공의 경험과 성취에 대한 기대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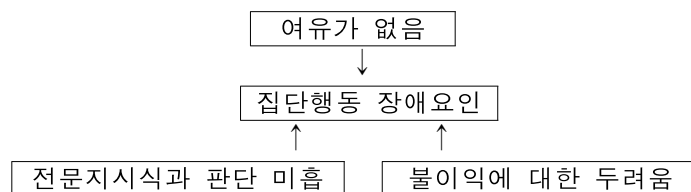
이러한 성공에 대한 경험과 기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많아지면 다음 목표로 잡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업 참여와 성공에 대한 경험과 기대, 참여의 증가 등을 정리하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 행동의 맥락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집단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쟁점에 공분하면서도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은 집단행동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거나, 집단행동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 여유가 없다. 다음, 자신들에게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내 해당 문제와 쟁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일천하다. 끝으로, 집단행동을 했을 때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을 정리하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지역사회 구성원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

따라서 초기 집단행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은 노력과 부담으로 가시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문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가지지 못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이 성공의 경험을 느낀 작은 쟁점과 문제에서 시작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하는 큰 쟁점과 문제로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최소한의 참여와 노력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쟁점과 문제를 선정하고, 여기서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와 쟁점을 선정하여, 집단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셋째, 집단행동에 참여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대 감정, 즉 구성원에게 지역사회 시민조직, 그리고 다른 구성원이 '우리(wenness)라는 심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시민조직과 정체성을 같이하고, 공동의 이해를 가지며, 우리라는 인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정체성과 이해,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면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와 쟁점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행동하며, 조직화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지, 행동, 조직화 과정

구분	내 용
1	- 지역사회 내의 문제와 쟁점, 또는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솔선수범하는 행위가 일부 지역사회 구성원을 자극 - 집단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
2	- 지역사회 구성원이 행동을 시작하는 전략 수립
3	- 행동전략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행동해야 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 정확히 규정 - 문제와 쟁점 해결을 위한 행동 시작
4	- 지역사회 문제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호응 확보 - 지역사회 구성원이 추가로 참여
5	- 행동에 참여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해당 문제와 쟁점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둠 - 지속적인 행동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 조직과 연대 추구
6	-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 - 기존 지역사회 시민조직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시민조직을 구성
7	-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행동전략을 수립 -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성과를 확보 - 구성원에게 자원과 복지의 분배,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제공
8	-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구성원이 행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훈련을 실시
9	-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일상적 의사소통이 조직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과 원활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10	-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자원 개발 -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보다 적음

11	- 지역사회 내 다른 시민조직과 연대를 구성
12	- 지역사회 시민조직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 실질적으로 진행
13	- 지역사회 시민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구성원 확보 - 지역의 새로운 문제와 쟁점 해결을 위한 사업 지속

이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조직화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의 시민교육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 촉진 경로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역사회 시민조직 통제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지역의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기하며,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이 사업의 선정과 구체적 전략 수립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선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구성원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시민조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구성원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지역사회 시민조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시민교육에서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지속과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맡아야 하는 권한과 책임, 의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사회운동화를 위한 토크아보기

가. 시민교육의 허약한 근육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시민교육 실천이 당면한 문제가 노정된다. 시민교육과 시민사회운동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을 토크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에서 거대 담론의 시대가 용도 폐기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이 삶과 사회의 한 단면만을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는 거대 담론이 아닌 풀뿌리의 시대, 즉, 생활세계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교육 관계자들도 거대 담론은 지나갔고, 이제는 풀뿌리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풀뿌리의 시대, 생활세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풀뿌리의 시대, 생활세계에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나 아직 만나지 못한 지향점을 세우고, 그곳을 향해 갈 때, 그 발걸음 앞에 길은 없다. 길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좌절할 까닭도 없다. 길은 애초부터 없었고, 우리가 가면 길이 되기 때문이다. 멀리 보이는 지향점만 바라보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물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 발끝을 바라보아야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발끝만 보다가는 지향점을 놓을 수 있다. 지향점은 거대 담론이고 생활세계는 발끝이다. 사람의 숨이 들

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고,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거대 담론과 생활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 서로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커다란 소나무와 큰 바위처럼, 독자성을 갖되 함께 있어 서로를 완성시켜주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둘째,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는 자주 교육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교육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 부족하다. 백인이 있으면 백인이 서로 다르게 교육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따져보면, 물리나 화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물리나 화학의 원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물리나 화학의 개념과 의미가 명징하게 구축되어 있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 그 개념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합의도 부재하다. 지배집단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욕망에 따라 교육의 의미가 달리 사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육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 시민교육을 정의하거나,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

셋째,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규정해야 하는 시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선, 시민의 성격 규정을 미루고 있다. 예를 들어, 수구사익활동에 치중하는 단체가 있다. 그 구성원이 시민이라면, 그 단체 역시 시민단체라고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도 시민이라면, 이 역시 시민단체라고 규정해야 한다. 시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를 시민이라고 할 것인지, 또는 누구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시민이라고 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각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다음, 시민이 현재 상태에 위치하고 있는 층위에 대한 고려가 일천하다. 이 층위는 가치판단을 위한 개념은 아니다. 덧셈을 하는 단계에 있는 시민과, 미적분을 하는 단계에 있는 시민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시민의 층위를 짚어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량과 상황, 지향에 적합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시민교육의 지향과 내용을 명확하게, 실감나게 설명하지 못한다. 돌려 말하자면, 시민교육의 내용이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이 생활세계의 무엇과 관련되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실감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에서 내용과 방식, 지향 제시가 융합되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함께 그럴 수 있는 꿈을 시민교육에서 피부에 와닿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민교육을 통해 함께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이 되면 하는 말과 행동, 더불어 두루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하자.

넷째, 자신들이 실시하는 시민교육의 본모습과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 많이 알려진 책 가운데 성경이 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수천수만 배로 늘어났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외면하기 이다. 그러나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시민교육 활동에도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시민교육을 하고, 또는 시민교육을 할 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는가 등이다. 시민교육 활동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시류에 영합하여, 주변의 말에 좌우되어 떠도는 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 하는가?

다섯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민교육의 토대 구축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시민교육의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을 시민교육으로 유인하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반시민교육적 행위도 나타난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이다. 지역사회에 시민교육의 토양을 만드는 데 주목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길 가의 돌맹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 동안 '땅심'을 기르는 데 전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이 알게 모르게 견지하고 있는 단기처방주의, 대중요법 중심주의, 추수주의에 대한 지적을 비켜갈 수 없다. 혹시 빠져들고 있을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도 따져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똑똑한 활동가가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을 질리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시민교육활동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교육활동가들의 열정과 노력, 희생과 애씀을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도 높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과 더불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만 더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관계 맺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 맺기, 자신과 다른 세계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삶과 사람의 되살리기이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 방법과 수단의 너비와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삶과 사람을 되살리는 시민교육 영역에 사귀기, 공감하기, 나누기, 신뢰하기, 의제 발굴, 실천 등의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 시민교육의 방법과 수단은 때와 장소와 상황, 주제와 대상에 따라 새로이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 이는 시민교육 참여자, 시민교육의 상황과 환경 등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시민교육 참여자의 특성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떠한가, 즉, 참여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리의 부리와 토끼의 귀는 하는 구실이 다르지만, 그림을 보고 오리의 부리 또는 토끼의 귀로 인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오리의 부리 구실이 토끼의 귀가 하는 노릇으로 강제될 수 있고, 토끼의 귀가 오리의 부리 역할을 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빛의 의미는 물리학자, 종교가, 미술가에게 서로 다른 차원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민교육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교육의 내용에 삶과 사회에 대한 감성 되살리기가 담겨야 한다. 시민교육에서 너무 이론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은 수위를 조절하고 방법을 색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경우 처음부터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짚으며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참여자들이 생소한 표현과 용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 전문을 읽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참여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제거하고 참여자와 부드럽게 노동의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실무역량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의견을 모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며, 실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실무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민교육을 주도한다. 그런데 시민교육 실시 영역에서 정작 활동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즉 전문성이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문성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열정과 헌신, 진정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청소년시민활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화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유인책으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만 한다. 이러면서 청소년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참석한 청소년들의 후속활동을 기대한다면 나무 위에서 물고기 구하는 것 보다 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후속활동을 위해서는 참석했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열정과 헌신, 진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을 만들어 낸다면 시민교육의 전문성이 발휘된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청소년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2000년부터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고, 최근이야 청소년 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의 출발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 외부의 의견이었다. 지나친 단순화를 무릅쓰고 판단하자면, 시대 변화와 대응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관력과 통찰력의 일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열정, 헌신, 시민의 감성에 대한 공감, 문화적 이해,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당을 열고, 어울려 즐기며, 이것이 시민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교육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에 시민들의 정서, 감성이 배어들어야 한다. 감성과 행동을 이끌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민활동에 대한 동기는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교육활동가가 신명이 나도록 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목적을 달리 표현하자면 '더불어, 두루, 누리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그 때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 마음가짐 가운데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손발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너무도 자주, 이러한 꿈과 함께 함을 외면하여 시민교육 활동가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한다. 이를 견디기 위해 활동가들은 강박해지고, 교조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돌아보면, 뜻밖의 곳과 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시민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청소년 시민교육의 경우 우리는 당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위적인 것이 그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배경을 두루 살펴야 한다. 대부분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야 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두려움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중고생의 경우 대입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대학생의 경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심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시민단체 활동이 칙칙하고, 찝지 않을가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 당면하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주치는 문제이다. 이는 청소년 시민활동을 기획할 때 해결해야만 하는 지속성의 문제이다. 다음, 청소년 시민활동에 활동가들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청소년 활동이 몰락하거나, 활동가가 만든 틀에 사로잡

혀 고사한다. 여기서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은 활동가가 왜 개입했고,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에 개입했는가 이다. 많은 경우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굳어진 자신의 판단과 가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청소년 시민교육은 시민의 힘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청소년의 힘을 구축하고, 청소년 스스로, 그리고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에서 상식적으로 되떠올려야 할 것도 있다. 시민들에게 시민활동을 권유하거나 부당한 것을 고치는 데 함께 하자고 하면 우선, 두려움을 갖는다. 이 두려움은 시민들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냉소, 비웃음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임승차로 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매무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들이 스스로 설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시민들 스스로 주변의 삶과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음, 작은 행동과 참여로 성취하고 이기는 경험을 갖도록 하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끝으로, 스스로, 현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 시민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게 마당을 열어야 한다. 우선, 시민교육이 재미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질기게, 모질게, 우직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함께 '꺼리'를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에서 활동가는 시민의 경험 정도와 이해 수준에 맞게 내려가서 시민을 만나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제시하고 함께 하고,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백조의 발 처럼 보이지 않는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하도록 조장하고, 활동가는 이선으로 빠지는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활동가와 시민은 공공선을 지향하고, 더불어 두루 누리기 위한 행동과 실천을 하며, 측은지심과 정의감을 일깨우고, 삶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감성을 되살리려야 한다.

참고문헌

- 김창엽(2004).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시민교육의 실천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제19호**. 137-154.
- 김창엽(2005). 시민단체와 시민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제21호**. 31-48.
- (2006). 시민사회 분화기의 '참여연대' 시민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창엽(2016). **시민교육**. 서울: 청목출판사.
- 김창엽(2017). 시민성과 시민교육을 통해 보는 평생교육과 사회정의의 연리지. 2017한국평생교육학회연차대회 자료집. 375-390.
- 김창엽(2017).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리지. 성남시 특강자료.
- 김창엽(2017). 시민성과 시민교육, 그리고 시민강사의 역할. 서부여성발전센터 특강자료.
- 김창엽(2017). 시민교육의 씨줄과 날줄 - 시민과 시민성.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특강자료.
- 김창엽(2017). 시민교육과 시민사회.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자료.
- 김창엽(2018). 보편적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치와 의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센터 특강 자료.
- 김창엽(2018). 역사적 맥락에서 본 시민형성과 시민성. 광명평생학습원 특강자료.
- 김창엽(2018). 시민학 - 시민과 시민교육, 시민운동.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자료.
- 김창엽(2018). 시민형성과 시민성, 시민과 시민교육과 통(通)하기. 전주시 특강자료.
- 김창엽, 성낙돈(2006).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2(3)**. 97-123.
- 김창엽, 성낙돈(2008). 헤게모니 관점에서 본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 **한국교육, 35(1)**. 125-150.
- 김창엽, 성낙돈(2011). 지역사회 내 NGO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동 기반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실행연구, 제14호**. 31-52.

<4강>

지방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조선희(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강>

민주적으로 토론하기

박수정 (에듀플랜 대표)



공동의 목표



남태평양에서의 조난

상황설명

여러분은 남태평양상에서 요트여행을 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화재로 요트 대부분과 요트에 실려있던 물건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현재는 요트마저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 항해장비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남남서 방향으로 약 1,800km 정도 떨어진 해상입니다.

다행히도, 고무구명보트 하나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침몰해가는 배를 탈출하고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겨우 아래의 15가지 물건뿐이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물건은 모두 합쳐보니 겨우 담배 한 갑, 성냥 몇 갑, 그리고 만원 권 지폐 5장뿐이었습니다.

만약, 아래의 15가지 물건들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순위를 매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물건이 1번이고, 가장 덜 중요한 물건이 15번입니다.)

물건의 이름	내 결정	팀 결정	정답
위도/경도계			
면도용 거울			
물이 들어있는 한말들이 물통			
모기장			
군의 야전용 식량 한 상자			
태평양 지도			
물에 뜨는 방석			
윤활유와 휘발유가 혼합된 기름 두 되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			
상어를 퇴치하는 약품			
8,8리터 들이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			
푸에르토리코 산 80도짜리 술 한 병			
4,5m 길이의 나일론 줄 한 묶음			
초콜릿 두 상자			
낚시도구 상자			



기적의 신약 발명!

‘Eduplan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AIDS환자를 낮게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만약 당신이 이 치료제를 사용할 권한을 가졌다면?

이제 당신은 다음에 나오는 7명의 환자들 중 치료제를 투여 받을 한 명, 목숨을 건질 단 한 명을 결정해야 한다.



게임의 규칙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피하라.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라.

#상대의 의견이 논점을 빗나갔다 해도 건설적인 것으로 고찰하라.

#예를 들어 다수결의 원칙,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중간으로 하자"는 식의 중간치셈 혹은 물물교환식 거래 (내가 너에게, 그러면 난 너에게 식) 등의 갈등해결기술을 피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일치할 때만 그 의견을 지지하라.



7명의 환자를 소개합니다



1. 무역상
2. 동성애자
3. 독신남자
4. 독신여자
5. 아기
6. 15세 소녀
7. 의사

입장의 차이

시민교육공동체 EduPlan



♣ 내가 면접관 이라면

여러분은 입사시험 면접관입니다.

성별, 학력, 나이, 장애와 관계없는 업무에

지원한 지원자들 중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황	점수	이유
60대 퇴직 공무원		
50대 전업주부		
40대 조기퇴직 회사원		
30대 장애인		
20대 증졸 알바생		

♣ 내가 구조대라면...

여러분은 전쟁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에 사람들을 구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에게겐 커다란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4명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빵을 나누어주어야만 차별적이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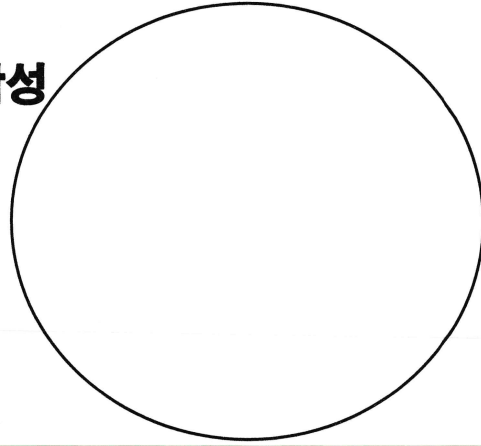


5일 굶은 10살짜리 어린아이

2일 굶은 90세 할머니

25세 여성

건강한 25세 남성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훈데르트바써(1928-2000)



EDUPLAN
시민교육공동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황순원로 73번지

031-775-5783

<6강>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자: 민주시민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상상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

인간은 자기목소리를 가진 존재이다

하이데거의 통찰인 '언어는 존재의 집'은 인간존재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선언이다. 이때 언어는 도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실존적인 인간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밥먹었니, 어디 사니, 이것 해라'라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고유성과 의미를 드러내고 타자에게 묻는' 실존의 드러냄을 의미한다.

언어는 말과 글이 있다. 글은 논리적이고 깊은 성찰을 담을 수 있지만 말에 비해 독백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다. 말은 글에 비해 상황하고 군더더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대화적이고 개개인의 경험을 담고 있다. 말과 글은 모두 인간존재가 사는 집이다. 하지만 말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말을 걸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개개인의 개성을 훨씬 풍부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존재의 집의 주인 중의 주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말로 실존적인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자기목소리를 낼 때 실존할 수 있다. 자기목소리는 또 다른 자기목소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즉 대화를 통해 내 존재의 집은 변화하고 또 변화한다. 또 다른 자기목소리들도 나의 말을 통해 성찰하고 변화하고 또 변화한다. 이런 점에서 자기목소리들의 광장은 공동성찰을 매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나와 공동체는 실존한다.

2.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와 토론하는 동료들의 커뮤니티 센터

말하는 존재, 호모 폴리티쿠스

우리는 왜 권력을 가져야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쾡쾡대는 동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깨닫는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혼자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정치행위는...

쾡쾡대는 동물로 취급되었던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만들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며,
새로운 주체들과 공동의 무대에 오르게 한다.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새로운 주체들과 공동의 무대에 올라서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대에서 박수 칠 생각만 했지 무대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콩콩대는 동물에서 말하는 존재가 되어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행위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 폴리ტი쿠스라고 규정했다.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자기 관점을 갖는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 적어도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 내 생각이 그대로 조건을 만들 제도나 정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모여 작성한다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호모 폴리ტი쿠스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이 권력은 동료들과 토론하고 연대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토론하는 동료들, 즉 세력들과 함께 자신의 철학을 정책이나, 제도로 관철해 가는 것이다.

커뮤니티 센터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

공동의 무대에 오를 인식이나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 도서관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을일 수도 있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취약계층(클라이언트)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마을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 호모 폴리ტი쿠스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나는 가정, 학교, 복지관 등을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이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내 아이들도 시민이라는 것.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 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나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 그렇게 된 나는 끊임없이 그 광장을 매개하는 매개자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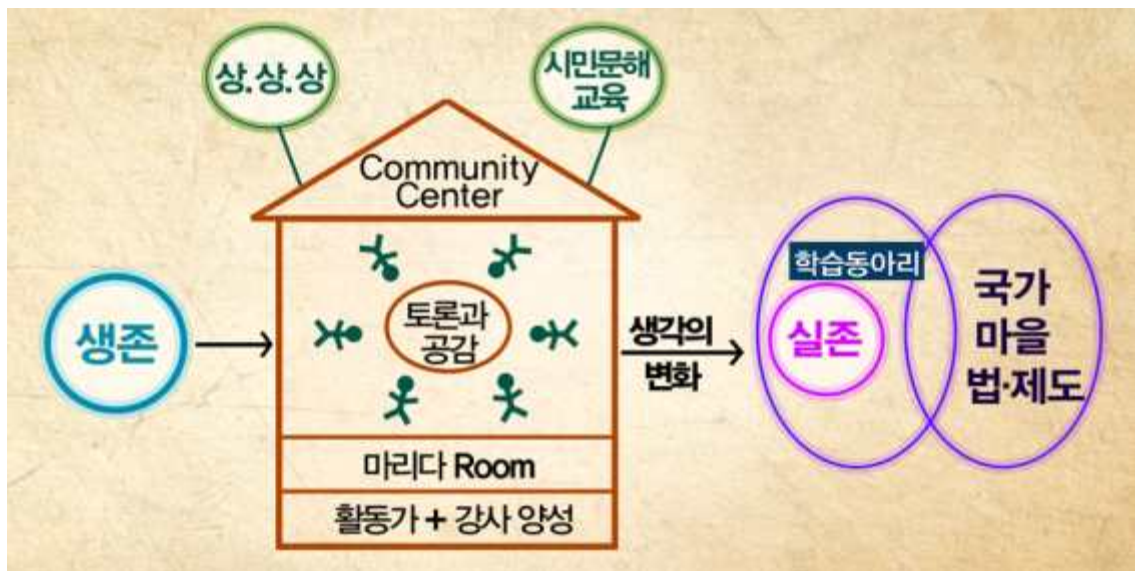


이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생존만을 위해 사는 나는 호모 커뮤니티센터에서 호모 폴리ტი쿠스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공감해야 한다. 토론과 공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권리를 자각하고 그 권리를 실천하는 것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시민문해교육이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센터는 시민문해교육의 실험실인 것이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수적인 것은 매개자이다. 매개자는 활동가, 강사들이다. 이 활동가와 강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개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에서 모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실존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 묻고 변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실존이다. 이 사람들은 혼자여서는 안되고 함께 해야 한다. 이때 학습동아리가 중요한 토론과 공감의 광장이다. 북유럽에서는 학습동아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사회 도처에서 기초적인 요소로 존재한다. 이런 사회를 학습동아리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토론들이 국가, 법, 마을, 제도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커뮤니티 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속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그 속에서 머무르면 안되고 나와서 실존을 자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들을 해야 하는데, 동물로 보면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공감합시다’ 하는 과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마을을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문해교육은 자신이 말하는 존재인 호모 폴리쿠스라는 자각의 과정이다. 자각의 핵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당하게 만든 그 놈을 문제삼는 것이다. 즉 달을 보라는 달달놀이다.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그 놈, 달달놀이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왈쩌(Walzer)는 사람이 비판적 거리둠(critical distance)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조합이 노동자 일반을 위한 것인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 때가 있다. 즉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권력과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본질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즉 권력(이익)으로부터는 떨어지되, 공동체에 긴박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판적 거리둠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센 권력이 자본이다. 자본으로부터 떨어지되 인간의 권리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마리다

<그리스도가 있는 마리아와 마리다의 주방>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다. 앞에서 후추를 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르다는 작은 방에 있는 마리아의 언니이다. 두 자매가 마리아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이다. 예수를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 마리아가 가서 듣고



있다.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한다. 반면에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의미만 묻는다. 의미만 묻는 사람이 좋은가, 일만하는 사람이 좋은가. 마리다는 창조된 인물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합성해서 만든 인간형이다. 마리다는 끊임없이 의미를 물으면서 일을 한다.

마리다는 의미를 물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실천한다. 이런 실천이 프락시스

(praxis)이다. 커뮤니티 센터는 기본적으로 마리다의 방이 있어야 한다. 마리다의 방들 속에서 강사도 있고 학습도 하고 테이블에 모여 토론도 해야 한다.

마리다는 자각하고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이 대화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없다. 마리다는 대상을 보고 선생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도 이야기한다. 이때 선생은 학생이 되고 학생은 선생이 된다. 따라서 선생의 학생들, 선생의 지적인 노예가 되지 않고, 선생들과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마리다들의 대화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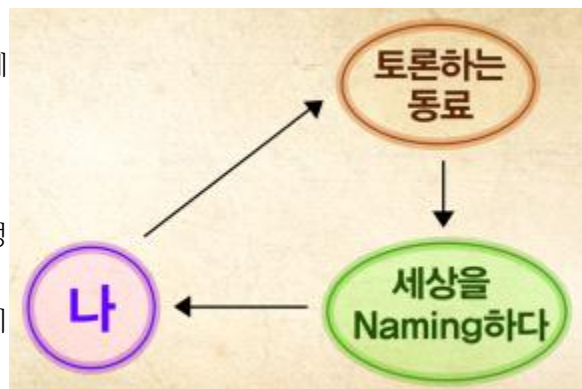
이 대화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가' 마리다는 AC를 알고, '나' 마리다는 CB를 안다. 그래서 둘은 C를 공통으로 알고 있다. 그런 다음에 너가 먼저 이야기를 해봐, 이야

기를 하는데 AC를 아는 '가' 마리다가 이야기하면 '나' 마리다가 CB가 넓어진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해봐, '나' 마리다가 이야기하면 '가' 마리다의 AC도 넓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상대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다. 상대에게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한다. 따라서 이런 토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서로에게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동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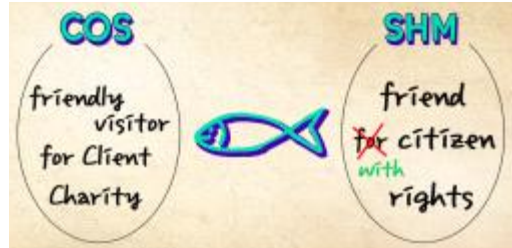
토론하는 동료들은 함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함께 이름을 짓는다. '달달놈'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불평등은 인간의 존재론적 본성이라고 보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적소유를 가진 존재이고, 경제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달달놈이 규정한 것(네이밍한 것)이다. 토론하는 동료들은 새롭게 네이밍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리다들은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실천

이 달라진다. 내가 토론하는 동료들 만나서 세상을 끊임없이 네이밍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호모 폴리틱쿠스로서 공동의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조건들을 다시 재규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도 새롭게 정의하고, 임금에 대한 것도 새롭게 정의하고 토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그리



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적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러면 저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는 누군가가 혼자 답을 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혼자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달달놈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마리다들의 대화에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되어야 한다. 마리다의 실천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자선’의 friendly visitor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는 ‘friends with citizen’가 되어야 한다.



알린스키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 알린스키는 좋은 사례이다. 그는 미국의 빈민 운동가이다. 알린스키는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고 주장한다. 어떤 신부에게 가서 그는 정의를 말하기보다 그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 “신부님, 저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

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함께 하시면, 교인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알린스키, 2016).

알린스키의 또 다른 사례는 은행대출과 관련된다. 어느 은행에서 흑인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알린스키는 흑인들에게 소액, 예를 들면 10원씩 나눠준다. 그리고 그들이 저축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10원을 들고 줄을 서서 저축을 한다. 저축이 끝나면, 다시 이들이 이 10원을 찾으러 줄을 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은행업무가 마비된다. 결국 은행은 흑인들에게도 대출해주기로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철학(방향 혹은 전략)이 만들어지면 실천방법과 전술이 고민되어야 한다. 핵심은 권리의 자각과 그 권리를 자각한 사람들이 힘을 갖게 하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자선형 실천과 달리 권리형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형 실천

시민들이 권리를 자각하고, 그들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나가는 행위를 자선형 실천과 대비해서 권리형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형 실천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유형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탁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하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이 틀릴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겼다.

권리형 실천

유형	소크라테스 유형	헬렌켈러 유형	은발의 표범형
내용	나를 살펴봐: 학습과 토론	주위를 둘러 봐: 조사와 연구	함께 만들어 봐: 참여와 조직화
실천	- 학습동아리 - 세대공감활동	- 지역조사 - 사회문제연구 - 지역신문	- 의회/정책 모니터링 - 사회적 경제 - 정치참여

소크라테스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당대의 현자들을 다 찾아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두 자신처럼 모르는 것이 많은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이후 자신이 똑똑

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 까지 끊임없이 상대에게 질문한다. 그래서 아테네의 등에(쇠파리)가 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 유형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자선형 실천은 헬렌켈러 유형이다. 헬렌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끊임없이 사회를 비판한다. 노동의 영역, 참정권의 영역, 장애 영역을 비판했다.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한다. 세 번째는 은발의 표범형이다. 은발의 표범은 독일노인정당이다. 이 노인들은 정당을 만들어 자기들만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권리형 실천은 함께 만드는 것으로 참여와 조직화를 내포한다.

권리형 실천은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자기 공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건강프로그램은 보통 의사들을 초대해서 고혈압, 당뇨 예방법을 공부하거나, 웰다잉인 죽음준비나 자산관리 등을 한다. 이 사회복지사는 '개인건강은 그동안 충분히 공부했으니, 사회가 건강한지도 한번 봅시다'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체육시설을 조사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인들에게 적합한지 등을 조사해서 이것을 정책제안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과 함께 프랭카드에 '청년들이여, 힘내라'고 써서 대학에 가서 커피를 주면서 대화의 광장을 만들었다. 대학생들이 감동을 했고 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여기껏 우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하러 노인복지관에 간 적은 있지만 노인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힘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다. 관점이 바뀌니 실천의 방향과 내용도 바뀌는 것이다.

상상상의 길을 만들자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실천할지는 자기 공간에서 자기다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공간이 커뮤니티 센터이고 학습동아리이다. 이 공간에서 달달눔으로부터 벗어나서 토론하는 동료들의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그 학습동아리가 권리형 실천을 하는 마리다들과 함께 법제도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대안사회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어떤 상상들을 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것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와 의 motto이다. 상상상

이다. 그동안 학생들과 공부를 하던 중에 다양한 책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강의가 매개가 되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하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이길 기대한다.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야 말로 커뮤니티 센터인 셈이다.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마중물 사례를 중심으로

마중물이란

마중물은 혼자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하수를 마중하는 한 바가지의 물이다. 수도시설이 없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던 시절을 생각해보라.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 나가는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 일명 마중물! 이 마중물과 펌핑의 인문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펌핑의 인문학은 나를 지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비판이자 실천을 의미한다. 마중물은 이 실천의 의미, 방향, 내용을 그 은유 안에 담고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펌프에 붓는 적은 양의 마중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지하수를 마중해 데리고 온다. 한 바가지의 물이 잠자는 물을 마중해서 모이고 모이면 궁극적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듯이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마중물은 우리에게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마중물의 두 번째 특징은 맑은 물, 빗물, 구정물... 모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물이든 상관없다. 이것은 마중물이 활동가, 전문가, 교수 등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결핍을 느끼거나,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때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비판으로 깨어난 '자각한 시민'들은 비판을 공유하며 조직이나 기관의 회원이 되어 '조직된 시민'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조직하는 시민'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마중물은 우리 가까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변화가 중앙이나 도심에서부터가 아니라 도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과 마을, 현장 곳곳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책 입안가와 시민교육가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다.

마중물은 어디에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것이 마중물의 네 번째 특징이다. 마중물은 바가지뿐 아니라 고무신이나 모자에도 담아 펌프에 부을 수 있다. 이것은 마중물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다.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나는 행위로써 마중물의 사회적 의미는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드러낸 채 토론하며 성찰할 수 있는 열린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마중물이 버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물을 마실 수 있다. 땅속에 있는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고 자신은 버려지는 마중물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버려지는 마중물은 『해석과 사회 비판』에서 왈찌가 말한 권력에서는 떨어지되 공동체에는 긴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밀착해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이때 비판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책까지 향해야 한다. 버려진 마중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흘러내려 가다 다시 또 다른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펌핑의 인문학>에서, 2014. 2. 14).

소유와 차별이 우선이 된 세상

한국의 현대사는 비극적이다. 화합과 대화보다는 분단과 적대, 분배보다는 성장중심, 극단적인 이분법과 증오가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차이는 우월이 되었고, 연대보다는 경쟁이, 소통보다는 소유가 중심 가치가 되었다. 지금 시민들은 분열되어 더 소유한, 더 경쟁력있는, 더 우월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 부끄러워한다.

소유가 우선이 된 사회에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내 사람, 내 이익, 내 교인, 내 지역이 모든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 대기업의 폭식에서 중소기업은 없다. 자본은 노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종교는 그 정신을 전파하기 보다는 교인을 소유하기에 바쁘다. 우리 진영의 이익 앞에 다른 진영의 생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열만이 존재한다. 적자생존,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적대와 증오의 정치이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고 상대는 악의 축이고 뿔방꾼이다. 정치는 상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시민들은 동원의 대상이다.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토론은 존재하지 않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사회는 소통보다는 소유가 차이보다는 우열이 우선이 된 세상이 되었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사단법인 마중물(이하, 마중물 법인)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당당한, 소유보다는 소통이 우열보다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공동체를 꿈꾼다. 이를 위해 제도 정치에 기대하기보다 제도정치를 견인하는 시민들의 힘을 형성하고, 이 사회권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마중물 법인은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의 한바가지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여기에서 시민교육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정책은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중물 법인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당당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조건의 형성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 있다고 본다.

마중물 법인은 새로운 변화가 위로부터의 제도권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민주도의 사회권력이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모델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에서 찾는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여 학습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다!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사)’(이하 사단법인 마중물)은 자기목소리를 내는 시민과 이들이 사는 광장의 형성을 고민해 왔다. 이를 위해 첫째, 자기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고 이것을 익히고자 했다.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해라. 읽고 말하지 말고 우선 듣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읽고 쓰자. 책을 읽을 때도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 말하자. 마중물 세미나도 강의를 듣고 토론하지 말고 토론을 하고 강의를 듣자.

이상의 원칙들은 자기목소리가 편안히 드러내기 위한 연습이었고 마중물들의 실존이었다. 둘째, 사단법인 마중물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풍부한 존재의 언어를 위해 학습했다. 10년간 이어 온 마중물 세미나,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어 온 책/영화/정치에 관한 토론, 매년 진행해 온 시민교육전문가 아카데미/정책전문가 아카데미, 그리고 마중물민주시민대학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공부를 해 왔다, 이 공부는 자기목소리를 내는 성찰이었다. 셋째, 사단법인 마중물은 우리의 실존을 이웃과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했다. 이때 우리는 전도가 아닌 전파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을 우리 집으로 인도하는 소유적 실존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 전파는 각자가 자기 공간에서 실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공간에서 자기다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마중물다운 방식이다. 넷째, 내 목소리로 실존적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소유적 실존을 추구하는 목소리들이 강한 세상에서는 존재적 실존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쪼그라든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목소리는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오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세상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목소리는 실존의 항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사단법인 마중물은 도처에 자기목소리를 내는 작은 광장들인 학습동아리들을 만들고, 이 학습동아리들의 목소리들로 존재론적 실존을 늘상 위협하는 불평등과 소유적 실존에 맞서고자 했다.

협동조합은 소유적 실존의 신화에 맞선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실존적 존재들이 학습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세상의 광장을 상상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협동조합이 우리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실현할 몸체이자 실존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이 하나의 실존의 집이 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첫째, '이기적인 인간들이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이라는 신화에 저항한다. 이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인간은 진짜 이기적인가? 사실 이 신화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이기적일 때 가장 이롭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기적인 인간들의 영리추구의 기업은 당연시되었다.

협동조합은 인간은 이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증거는 무수히 많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타적이었는데, 사적 소유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다윈도 이타적인 종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이타적인 사례가 이기적인 사례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인간의 이타성과 이기심의 가정에 모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계, 상황, 구조에 따라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가족관계와 거래관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시장지상주의(libertarianism) 사회와 자본주의를 고쳐 쓰려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려는 사회주의의 시민들이 태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사단법인 마중물은 협동조합이 연대하는 인간들의 생산과 분배의 새로운 형태라고 본다.

협동조합은 둘째, 기업은 1원 1표에 기반한 본질적으로 자본중심의 민주주의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기업은 자본이 최고인 세상이다. 자본가는 황제가 되고 노동자는 임금노예가 된다. 협동조합은 1원 1표에 맞서 1인 1표이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기업에까지 침투한 것이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과 생존을 익히지만,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와 연대 그리고 실존을 경험하는 광장이다.

협동조합은 셋째,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신화에 도전한다. 애초부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경쟁도 불평등도 당연하지 않다.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만인의 것이었다. 경쟁은 연대로 대체될 수 있고, 불평등은 조건의 평등으로 최소화되거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연대와 평등을 화두삼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실천하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넷째, 도구적 학습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우리는 소위 스펙을 관리한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회사는 생존을 위한 도구적 학습과 경력관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실존적 학습을 전제한다. 구성원들이 이윤과 자신의 이익에 머물 때 협동조합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신화를 비판하고 새로운 실존의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만들고 이 의지를 실현할 실천을 논의해야 한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협동조합의 이상에 대해 늘 비판적 거리둠(critical distance)을 가지려고 한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내에 있다.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 하다 보면 정신을 잃을 수 있다. 협동조합의 외피를 두른 자본주의 기업의 한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학습과 실천이 매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한편, 협동조합의 이상만을 쫓다 협동조합의 근거까지 잃어버리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도 경계한다. 협동조합은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서 늘상 인간과 공동체의 실존이라는 이상적인 방향을 쳐다보면서 생존의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팔긴 팔되, 생존의 상품에 실존의 철학과 꿈을 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는 협동조합의 존재론적인 모습이다.

마중물 협동조합은 인간실존과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의 실험실이다

자기목소리를 가진 존재론적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광장이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하 협동조합 마중물)이다. 협동조합 마중물의 광장은 사단법인 마중물의 정신을 익히고,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나고, 이 동료들과 함께 소유적 실존의 세상에 맞서려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의 실험실이다.

첫째, 협동조합 마중물은 학습의 실험실이다. 그동안 사단법인 마중물의 학습은 정치의 삼각형, 즉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정치를 학습했다. 협동조합 마중물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모든 학습을 문화를 익히고 학습한다. 플로리안 공감, 갤러리 미래, 이상/일상/상상 방, 서점과 카페는 학습이 문화의 토양 위에 이뤄질 수 있는 매개이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 마중물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톡톡, 지역주민들의 교양강좌인 심미안,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음회 등으로 풍부한 실존을 만들 문화를 만들어 왔다.

둘째, 협동조합 마중물은 소통의 실험실이다. 소통광장은 최우선적으로 조합원들의 간에 긴밀히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조합원들의 소통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지역사회로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카페, 서점, 토론방, 강의실에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배려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시민들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전파의 실험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 정신을 지켜가기 힘들다.

협동조합들이 존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신에 바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마중물은 학습동아리를 거점센터로 하는 실험실을 도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마중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독해진 실존적인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만나 즐거운 소풍길을 준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 소풍길은 자신의 목소리를 편안히 드러내는 광장을 거쳐 실존적 삶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상을 전파해서 이 이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상상의 여행이다. 고독한 내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